

第250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9號

國會事務處

2004年11月12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
- 2.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 1
- 2.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2
  - o 의사진행의견 ..... 15
- 2.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 17
  - o 의사진행의견 ..... 43
  - o 의원신상발언 ..... 44
- 2.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 45

(10시35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7대 국회에 들어서 종전 국회와는 달리 약속된 개의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개의 시간을 지키기로 약속한 이후에 오늘 처음 이렇게 30분이상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책 의총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개이가 늦어졌습니다. 물론 예상치 않던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당의 사정에 의해서 약속된 개의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당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원기 의사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합의되었던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김호준)선출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은 월요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제2항으로 예정되었던 것을 제1항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0시4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한명숙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제안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위원의 요청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청취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관 건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통칭되는 일본군 성 노예제도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외침과 사회적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일본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년간 90여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129명의 피해자도 거의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인류 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성 노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해서 해방 60주년이 되는 2005년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기 위하여, 또한 우리나라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주권 국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증언하는 역사관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인권회복을위한역사관건립을위한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와인권회복을위한역사관건립을위한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사회·문화에관한질문

(10시4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북도 익산시를 출신 조배숙 의원입니다.

새로운 기대 속에 17대 국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17대 국회는 초선 의원이 187명이나 됩니다. 때문에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17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모으며 과거 국회의 구태를 벗어나 정쟁을 지양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차마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650건의 법안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두고 우리는 귀중한 12일을 낭비했습니다. 국민들은 17대 국회도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회 파행만은 안 됩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와 정치,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거기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뒷전으로 미루고 시간이

약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현실을 인정하라면서 적반하장으로 억박 지른다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혼돈만 남을 것이고, 정치도덕은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성이 내팽개쳐진 정치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는 것이 혹 도덕 불감증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부도덕이 일제와 유신, 그리고 12·12로 이어져 온 과거의 아픈 역사를 단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하고 덮어두고 씩어 문드러지기를 기다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그 상처를 드러내고 씩은 부위를 도려내는 근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1949년 반민특위가 해체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 과거사 문제를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통해서 국민화합을 이끌어 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조사 대상에 정당 언론 자본 등을 포함시켰고,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실이 규명되고 잘못된 자는 용서를 받았으며 사회는 이를 수용하고 화합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과거사 진실 규명도 정치적 보복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통해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염원이자 참여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의 역사가 상당히 굴절된 역사였습니다. 내년이면 을사보호조약 100주년이고 해방 60주년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냉전 체제하에서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쿠데타를 겪으면서 군부 독재정권의 통치를 오랜 동안 받아 왔기 때문에 밝혀야 될 과거가 많이 묻혀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다만 과거사 진상 규명은 사실 진상 규명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미래로 가기 위한 진상 규명이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전세불망(前世不忘)이면 후생지사(後生之師)’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밝히고 또 후세, 미래를 열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다음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헌판결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연기·공주를 비롯한 충청권 지역의 실망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호남 북부 등 인접 지역의 실망과 좌절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큼니다.

저는 후세의 역사가들이 이 위헌판결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놓은 비극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지방 간의 사회·문화적 불균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어떤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잘 아시는 것처럼 신행정수도 이전이 현재의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인데, 기본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방향에 관해서는 현재도 인정을 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만이 아니고 지방분권화,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정책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해서 신행정수도로부터 1시간~2시간 범위 내의 교통 거리에 있어야만 서로 행정력이 분산되지 않고 국가가 균형되게 전 국토가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는 큰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위헌으로 현재의 결정이 나는 바람에 나머지 사안도 전부 재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공공기관이 곧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행정수도 없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과

도하게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또 수도권 과밀 해소도 여러 가지로 수도권 관리 계획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수도가 이전하지 않게 되면 수도권의 과밀 해소 대책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곧 정부 내에 후속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현재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들 여론도 조사하고, 의견 수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동안에 많이 들어서 금년 말까지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국회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중학교 중 22.9% 고등학교 중 45.1%가 사립학교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사학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사학은 이렇게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공공성에 대한 기대치도 높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교원 봉급을 비롯해서 사학 예산의 58%를 보조하는 등 사학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은 중등학교 법인전입금이 예산 대비 평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본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학은 공공성 담보를 위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학 법인은 학교를 자신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에 반하는 경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비롯한 우리당의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 운운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것은 공공성에 기초한 학교의 자율입니다. 법인의 왜곡된 자율마저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우리나라가 그동안 교육 예산이 부족해서 사학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길러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사립학교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중에서도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보면 예상외로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를 하는 사학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가려서 투명한 사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학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출연한 시점에서 이미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공 출연자산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사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지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사학의 수익용 재산이 부족해서 학교에 거의 전입을 못 해 주면서 운영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학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재단의 이사 구성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리고 또 일부 사학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학교 폐쇄까지 주장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재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쇄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그 재단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도저히 교육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이 오면 학교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99년에 그렇게 해서 학교를 하나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본인들도 거부하고 교육부의 판단도 더 이상 학교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에서 하나를 폐쇄한 적이 있는데, 학교 폐쇄라고 하는 것은 재단의 권리가 아니고 학생들의 권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사학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공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또 학교의 자율성이라든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사립재단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다음은 SBS 허가 의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26일 SBS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세전 순이익 15%의 사회환원이라는 허가 조건의 위반과 방송 프로그램을 지배주주인 태영의 사업 확장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제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0년 10월 SBS 허가 심사 때 태영은 매년 방송사 세전 이익금의 15%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최병렬 공보처장관도 국회 문공위 간담회와 국정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국회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이번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세전 이익 15%를 기준으로 할 때 SBS가 금년 상반기까지 출연해야 할 총 금액이 1052억입니다.

총리, SBS가 이 금액을 출연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돈을 출연 안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방송국의 경영에 대한 평가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의 관리대상 기관이 아니고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방송위원회가 했는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방송위원회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조배숙 의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을 속인 것이고 심하게 얘기하자면 사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정부는 당연히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조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문광부장관한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대 문광부도 방송사의 경영 내역이라든가 방송 내용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광부는 언론정책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방송의 구체적인 경영 내역이나 이런 걸 다루고 있지 않은데 그 점은 나중에 제가 문광부장관과 협의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SBS가 물 캠페인을 이용해서 지배주주인 태영의 건설사업 수주를 도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공의 방송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수의계약상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SBS 허가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청문회를 개최해서 설립 허가과정상의 특혜 의혹부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까지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현재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심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중에 나오는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 차원에서 결정하실 사안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건설사와의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리고 청문회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 등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최한다고 봤을 때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그다음에 정수장학회의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정수장학회의 설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7월 14일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백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 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5·16장학회에 강제 헌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아직 규명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정부에는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후에 유족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정수장학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하는 것은 필요 없는 오해를 낳고 오히려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어떤 형태든지 당시의 정권이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라든가 언론사를 강제 경매를 시켰다라고 하면 그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상 규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조배숙 의원** 그리고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9월 23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까지 지켜본 본인으로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9월 22일 밤 11시 반경부터 집창촌 업소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해서 영시가 되자 일제히 불이 꺼졌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집창촌 현장 활동가들은 거대한 시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부 관련자들의 반발과 사회적인 파장 때문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조직폭력의 위협과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이자 셈법의 빚에 눌려 있던 여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선불금 고리가 끊겼고 선불금 채무에서 자유롭게 된 많은 여성들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 지원을 위해서 내년까지 28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여성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공동으로 미리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조배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국가의 품위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성매매방지점검단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취지에 맞춰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정부에서 이번에 노력해 주셔서 일부 예산을 급하게 마련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조배숙 의원** 또 사회 일각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락문화의 창궐로 서비스산업이 부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경제가 가려진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하는 산업에 기대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산업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우리 경제의 규모가 이런 향락산업에 의존할 정도로 작지가 않습니다. 이미 GDP 규모가 6000억 불을 넘어서는 매우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매매를 통

한 향락산업에 우리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산업이 가능한 한 사회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할 때의 문제로 인해서 한나라당에 사과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이 만족할 수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원님께서 그 발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그 원고를 봤는데 ‘이해찬 총리의 국회의원 활동이 아주 실력이 저조하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대, 14대 때 상당히 활동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장내 소란)

○**조배숙 의원** (웃으면서) 자,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이나 이런 때 당직을 맡게 되면서,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중요한 당직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바쁘기 때문에 국회나 상임위에 출석을 잘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2000년에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등원도 하기 전에 4월부터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2001년 연말까지 거의 정책위 의장을 맡았고, 2002년에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줄곧 맡았고 그래서 사실상 16대 국회 임기 동안에는 내리 거의 다 당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신당을 창당하느라고 그 일에 전념했고, 그래서 거의 상임위 활동은 정책위 차원에서 했지 개별 상임위에 가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많이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 같은 경우는 정책위 차원에서 비교적 많이 한 편인데 개별 상임위의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위 의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자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배숙 의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난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이렇게 여야 간에 당직을 맡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회에 출석도 잘 못 하고, 이것은 서로의 어떤 양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의 품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 동안 전국적인 규모의 특별단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단속 덕분에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단속이 끝나자 그동안 숨죽였던 성매매가 다시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국가 품위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꾸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떠들지 않고 꾸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경찰 일선에서는 성매매 사범 단속을 위한 수사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구세군’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긴급전화 117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조금 다르게…… 117 전화가 소위 성매매피해여성긴급구조센터 전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소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성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조배숙 의원** 성과는 좋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전화를 한 번 통화하려면 계속 통화 중이고 통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전화기는 10대인데 인원이 2명인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아픈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5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치유되지 못한 6·25의 아픈 상흔들이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함

니다.

제 출신지인 익산만 해도 미 공군기에 의한 이리역 폭격으로 역무원과 선량한 시민 수백 명이 사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폭이라고 주장하지만 폭격이 일어났던 50년 7월 11일 이리는 전선이 아닌 후방지역으로 관공서가 정상 운영되는 등 폭격 대상이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도 없이 폭격을 했고 이것은 분명히 민간인 학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상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그전에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것이 오래된 일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일들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고 또 한 건뿐만 아니라 그런 의혹들이 제기된 사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16대 때 그와 관련해서 각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법 내지는 이런 형태로 많은 법안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조배숙 의원** 결국 폐기되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도 이번 17대 들어와서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인데 정부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집권세력의 의도에 의해서 진실이 은폐되고 역사가 왜곡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진정한 민주화란 과거의 왜곡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바로잡음’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혼란과 대립과 갈등의 밤을 지나 아침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우리 역사의 내일을 밝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다음 발언 들어가기 전에 질문 내용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있는데, 지난번에 국회가 공진된 것도 국회 부의장이 사회 진행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답변과 질문이 원칙에 어긋나면 제제도 가해 주시고 그 중간에 제재를 가하시든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재를 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배일도 의원 의석에서 - 사회를 잘 보셔야지 의사 진행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국회가 지난번에도 14일이나 공진되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나 5분발언을 신청하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서 제가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신청을 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선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 일은 거꾸로만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관찰 끝에 제 나름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있으나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 일이겠습니까? 길을 모르는 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또 막히면 또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도 돈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헌제가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판결한 데 대해서 “처음 들어 보는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들어 본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서 범조인 출신이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헌법 맨 앞에 나오는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대통령 말씀이니 그대로 믿고……

처음 들어 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몰랐다는 말 아닙니까?

또 최근에 대통령을 만나고 온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역시 잘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평소 존경하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학생 특강에서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약육강식이 우주의 진리 아니냐고 말하는 쪽에 가깝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께서 당시 이것은 “철학이나 노선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 공부를 안 한 탓이다. 학자들이 들으면 웃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정의채 신부님은 경제난과 국론 분열의 근본 원인으로 “정권 핵심에 있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경험한 386”을 꼽았습니다. 이번 국회 파행을 초래한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는 “인간성이 결여된 데다 부분만 볼 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이나 능력과 인품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 공부 안 했다, 안목과 능력이 없다, 무능, 무지, 무경험, 이런 말은 모른다는 말의 다른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언어 습관 같으면 무식하다, 꼴통이다, 이런 정도만 돼도 괜찮은 편에 속할 텐데 노 의원님이나 정 신부님은 참으로 점잖게 표현하셨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억지, 궤변, 말장난, 말싸움이 부쩍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대개 겸손합니다. 알아야 할 사람이 모르면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을 들키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 인간과 사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셨고 이를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다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 특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은 다릅니다. 대개 용감하고 당당합니다. 어떤 말이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동원합니다. 왜곡된 사실도 들이댑니다. 그리고는 지독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어디건 상관없습니다. 권위 있는 학회도 원로 어른들도 공신력 있는 외국 기관도 심지어 현재 판결도 공격합니다.

(「질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억지를 부리자면 못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판결에 대해서 “국회 입법권이 현재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아예 현재를 탄핵하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러다가는 국회 해산하자는 소리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습니까.

지금 횡행하는 억지 논리를 한번 원용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행정권이 국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잘못된 과거사, 독재 정권 때 만들어진 국회이니 없애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얼마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언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태생부터 권력과 상극입니다. 권력을 칭송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의 탈을 쓴 권력의 도구입니다. 권력자는 원래 언론에 대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최구식 의원, 최구식 의원!

마이크 주세요.

○최구식 의원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자가 아무리 화가 나도……

○부의장 김덕규 마이크 주세요.

○최구식 의원 언론 건드리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건드렸다가는 큰 재앙을 입도록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력자가 언론을 자기 손바닥에 갖고 있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독재국가라고 합니

다.

(장내 소란)

○부의장 김덕규 최구식 의원!

조용히 하세요.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꺼요!)

정리하겠습니다.

○최구식 의원 권력은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부의장 김덕규 최구식 의원, 의장의 말씀을 한 말씀 들어 주십시오.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사를 방해 하세요, 의장님!)

(장내 소란)

○최구식 의원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소란)

○부의장 김덕규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최구식 의원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짓는 감시견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언론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독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부의장 김덕규 최구식 의원!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구식 의원,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일도 의원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최구식 의원께서는 발언할 자유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마는, 대정부질문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장내 소란)

최구식 의원, 의장의 말씀에 경청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해당 의원이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지하시는 거예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최구식 의원 권력은 조금만 잘못해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짓는 감시견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언론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독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권에서 이른바 언론 개혁한다고 제출한 언론관계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5공 시절 대표적인 언론 악법인 언론기본법과 그리 비슷한가, 오히려 더한가 싶었습니다. 언론의 권력 비판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언론사에 대해 권력이 시시콜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쟁취한 언론자유를 다시 권력의 손아귀에 던지려 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론 역사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언론인들은 행간에 한 자라도 국민의 소리를 담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가지 명백하고도 일관된 사실은 방송은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어 기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권을 위해 방송했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된 게 남았지만 의장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무장관 나오십시오.

법조인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이해찬 총리가 답변에서 53년에 형법을 제정하면서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이제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한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맥락과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보안법은 60년에 전면 개정된 법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말씀하실 당시의 보안법은 48년에 여순사건 와중에 나온 것으로 오늘 보안법과는

취지나 정신, 조문 내용이 완전히 딴 법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총리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광주청문회 때는 국군이 대간첩 작전에서 간첩을 사살한 뒤 찍은 사진을 광주 현장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의를 표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임시국회 때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 패러디 사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언론에 대서특필되어서 웬만한 사람 다 알고 그날 출석했던 국무위원도 안다고 답했는데 유독 총리만은 대정부질문 답변 준비하느라고 신문을 못 봐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청와대 공작이라는 말은 의원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계속 우겼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당사자가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말을 했다고 그러는지 참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계서는 사과해야 할 때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사과한다’고 표현합니다.

○**최구식 의원** 사의를 표한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

(「물어보았으면 말씀을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이 그 부분은 잘 모르는 일 같습니다.

○**최구식 의원** 이해찬 총리가 “조선·동아는 더 이상 까불지 말라.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장관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구식 의원** 관습헌법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의원**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저희들은 일용 헌법교과서를 읽으면 관습헌법에 대해서 언급이 다소 있습니다.

○**최구식 의원** 법치의 수호자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결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권이 현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적절한 말입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현재는 헌법 해석과 헌법 분쟁 해결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결정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구식 의원** “현재의 이번 위헌결정은 헌법 해석의 권한을 넘어 입법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탄핵되어야 한다”는 말은 적절한 말입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속되어야 되고, 다만 현재의 결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과 논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의원** “헌법수호를 위해 만든 현재가 헌법을 어겼고, 헌법을 훼손했다”라는 말은 적절한 발언입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그것은 어떤 뜻으로 했는지 문맥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최구식 의원** 감사합니다.

행자부장관 나오십시오.

어제 존경하는 이방호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노동당 규약을 읽어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읽어 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최구식 의원**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안 찾아보았습니다.

○**최구식 의원**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 문제로 난리가 난 것이 언제인데 아직 그런 기초자료도 읽지 않으신 분이 장관을 하고 계시나 참 놀랐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 때 존경하는 김기춘 의원께서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 등에 대해서 묻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도 장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도 공부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가 그것을 꼭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행자부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꼭 입수를 하려면 입수를 하

겠습니까마는, 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디를 보면 있는지도.

○**최구식 의원** 제가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최구식 의원** 행자부장관은 뭐를 하는 자리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워낙 다양한 일이 많아가지고요.

(장내 웃음)

(「장난하는 거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워낙 서로 독립된 업무가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찰이 큰 업무이기는 합니다, 치안 유지가.

○**최구식 의원** 우리나라 헌법은 읽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최구식 의원** 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의원** 국무위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최구식 의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대통령을 보좌해서 자기 맡은 분야의 국정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국무위원입니다.

○**최구식 의원** 국무위원은 헌법 제87조에 나옵니다.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은 제94조에 나옵니다.

제가 어제 답변하시는 것,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국무위원을 모시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지, 저부터 잠을 자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이 북한의 위협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글쎄요, 그것이 행자부장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또 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는 질문에는 “글쎄요, 그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보니까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문제가, 중대한 국가 일이 다 결정되고 논의되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발언하십니까?

국무회의 때 뭐를 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

○**최구식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아니면 아는데 귀찮아서 답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야당 따위가 무엇을 하겠냐고.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최구식 의원** 모르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느낌 그대로 답변을 한 것이지 다른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구식 의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시지요.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이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인 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혹시 제안자 측 말고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는 주장을 들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헌인가 아닌가는 국회 입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구식 의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 권력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아직 조용합니다.

하지만 별 잘못이 없어서 그런 줄 오만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있을 뿐입니다. 매사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생살을 췌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무위원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오만하게 국민을 내려다보면서 함부로 탕탕 큰소리치고 억지와 오기를 부리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던 분이 없지는 않았습시다. 뒤에 그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책임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해찬 총리께 진심으로 권합니다. 사퇴하십시오!

그 길만이 이 도탄에 빠진 나라와 국민과 또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노 대통령을 위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경필 의원 등단하면서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장님!)

**○부의장 김덕규** 최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남경필 의원과 그리고 배일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사회와 관련한 발언 신청이신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의사진행발언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압니다. 드립니다. 드리지만……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세상에 마이크를 끄는 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의사진행발언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이제 못 믿겠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셔서 못 믿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대정부질문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을 때도, 속기록을 갖다 놓고 보십시오. 분명히 사회를 볼 때 의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바로 첫 번째는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질문자가 질문을 하도록 했고……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왜 마이크를 끄세요?)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2명밖에 안 됩니다.)

(장내 소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못 하시는 분이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끄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총리의 발언 그 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사회자께서 마이크를 끈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란 말입니다.)

마이크를 끄지 않고 제 말씀 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게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잘 압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고.)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이것은 사회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발언은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 사회자가 제기하세요.)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즉각 사과하세요.)

설명을 하면 서로가 구차한 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지난번에도 사회를 잘못 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대정부질문이 계속되는 만큼 의사 진행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왜 마이크를 꺾나 말이야.)

의장석에서는 마이크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 말씀을 들어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누가 꺾어요?)

(○정문헌 의원 단상에서 - 의장 허락 없이 마이크 끈 사람 누구예요?)

(○이혜훈 의원 단상에서 - 의장 허락 없이 마이크 끈 사람 나오시라고 하세요. 누가 꺾어요, 누가?)

잠깐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진행시키세요. 서재관 의원 빨리 질문시키세요.)

(장내 소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사태는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를 왜 꺼요?)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왜 마이크를 꺼요?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마이크를 끄고 그래요?)

발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문헌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가 왜 꺼졌냐고요.)

(○이혜훈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 끈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 말씀 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구식 의원에게.

(장내 소란)

(「다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있도록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마이크 누가 끄는지 밝혀야 됩니다. 마이크 끈 사람 밝혀 주세요.)

(장내 소란)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빨리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세요.)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꺼 놓고,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중단시킨 거 즉각 사과하세요.)

자, 질문이 계속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해서……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정문헌 의원 단상에서 -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은 대정부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 단상에서 - 누가 원만하게

못 합니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주의를 환기시킬 수가 있는 의장의 위치에서 최구식 의원에게 잠깐 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잠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우리는 못 물러 납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마이크 끌 것 아닙니까?)

내려가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협의해 주세요.

이렇게 의사 진행을 막는 것도 전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석부대표 간에 회의를 하세요.

(○정문헌 의원 단상에서 - 지금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문 열고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원 발언 중간에 마이크 꺼진 것이……)

(장내 소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도중의 의사진행발언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드립니다.

(○배일도 의원 의석에서 - 여기 145조(회의의 질서유지)에 순서가 있잖아요? 왜 그것을 적용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드리지만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를 하십시오.

지금 수석부대표가 나와 있으니까 협의를 하세요. 드립니다.

(○이혜훈 의원 단상에서 - 뭐가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해명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세요. 드릴게요.

(「서재관 의원님, 빨리 질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왜 간섭하고 끊는 거예요. 즉각 사과하세요.)

(장내 소란)

자, 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좀 내려가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모습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빨리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장님!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살아 있어요.)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을 왜 방해했고 마이크를 왜 꺾냐고 하니까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리저 마세요. 즉각 사과하세요.)

(장내 소란)

자, 협의가 됐습니까?

의장이 설명을 하면……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정식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뭔가 답을 하실 것 아니에요?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먼저 진행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하자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국회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의장님, 진행이 안 되면 정회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남경필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셔서 협의를 하세요.

(「의장! 즉각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단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해요, 내려와서」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대정부질문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형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즉각 사과하세요.)

(○이강래 의원 의석에서 - 국회법 보세요. 일문일답하게 되어 있어요!)

(「의장께서 먼저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 진행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빨리 잡시다」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을 이렇게 하든 저런 식으로 하든 왜 그 형식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왜 또 마이크를 끄고, 마이크 꺼 놓고 안 꺾다고 거짓말하시고…… 즉각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시고 빨리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장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는요, 정회를 직권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원내 대표끼리 얘기를 시켜서 회의를 좋게 좋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왜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느냐 말이에요! 146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 보든 저렇게 물어보든 그 형식에 대해서 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즉각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 ○ 의사진행의견

(12시01분)

○부의장 김덕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교섭단체에서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끝나고 의장께서 정중히 사과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앉아 계세요, 심재철 의원!

○남경필 의원 남경필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참으로 슬프니다. 국민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창피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사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료 의원의 발언 도중에 의장이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발언을 제지한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께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는 그 과정에서 의장께서 몇 차례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지적했을 때는 분명히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이크가 오작동으로 꺼졌는지 누가 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다”라고 우리의 문제 제기를 피하려 하시더니, 조금 전에는 “계속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이크 끄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의정 단상 위에서 국회를 대표해서 의사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얼굴이 저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윤리위원회 제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찬 총리가 극히 오만하고 당략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발언으로 하여금 국회가 당연히 파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의장께서는 총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제지는 물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진행을 요구하는 우리 당 요구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의장께서 오늘 같은 동료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제지하는 모습, 이것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잘못된 모습을 질타하고 바로잡는 것이 의장의 모습이지, 동료 의원의 질문을 제지하는 이러한 한심한 국회의장의 모습은 저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우리 의원 모두에게, 국민 모두에게 머리 숙여 조아리고 사죄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주일 동안 파행을 겪고 공

전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정상화되어서 지금 미루어진 숙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 앞에 면목 없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도 부분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상대 당 의원들이, 여당이 야당을 또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더러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고 말을 하다가 지나쳐서 실수가 나오든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사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성숙한 국회라면 항의할 것은 항의를 하고 따질 것은 따지되, 국회라는 제도적 절차 안에서 이를 진행하고 자기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항의하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성숙된 국회와 국회의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주간의 파행 직후에 국회의장께서는 양당 모두에게 상대 당을 자극하고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다시는 국회 파행이 있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까지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여전히 색깔론과 인신공격, 무식하다 무지하다 하는 그런 인신공격과 독재국가다 하는 이런 식의 과장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질문을 보면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양당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장의 의사 진행 문제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당연히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왜 그렇게 아부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주의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말을 하는데 잘 경청하지 않고서 의장의 권위를 무시할 때에는 그 발언을 제지하고 사회자가 주의를 촉구하고 환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국회부의장의 해명을 들어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국회 운영을 원만하고 또 양당에 대한, 상대 당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통해



서 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오늘 국회를 계속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당은 국회를 파행시키거나 공전시키는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끼리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갈등들, 오해들, 또 항의들을 충분히 양당간의 협의와 절차 속에서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덕규 남경필 의원과 김영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장내 소란)

오늘 잠시 의사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널리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은 아시는 바이겠습니다마는, 의사를 정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도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의제 외에 미쳐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의장은 의원이 국회법 등에 위배하거나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을 때 발언을 제지하거나 중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의장의 태도는 대정부질문이 매끄럽지 않게 설명으로서만, 발언으로서만 나오고 답변을 구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7분 정도 계속이 되길래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이것을 중지하거나, 이것을 제지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의장의 뜻이 전달이 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마이크가 끊어지도록 이렇게 했던 것은 의장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널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정부질문은 질문의 본래 취지대로 질문하고 답변이 계속되는 이러한 원만한 대정부질문으로 계속되었으면 하고 다시 한번 바라 마지않습니다.

## 2. 사회·문화에관한질문(계속)

(12시13분)

○부의장 김덕규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재관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출신 서재관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질문보다는 총리에 대해서 인간성이 결여되었다는 등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 나와서 승복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그 말씀은 전체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개인에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국회를 하게 된 취지는 어떻게든지 국정을 원활하게 끌어가자 해서 제가 성명을 통해서 사의의 말씀을 드렸고 그런 취지로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 어제 오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죽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냥 듣고 있습니다.

○서재관 의원 좋습니다.

지금 '사의'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사의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의 뜻이 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취지로 사의를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칠갑산 있는 청양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한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 고향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사과라는 표현보다는 사의라는 표현을 더 격조 높은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신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서재관 의원 오늘 저의 질문은 대부분이 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지켜보면서 성리학의 거두 송시열 선생이 인용한 논어의 한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식량과 군사, 그리고 백성의 신뢰, 이 세 가지 중에서 부득이하야 버릴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군사를 버리고 다음에 식량을 버리고 나

라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백성의 신뢰만큼은 저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이 외부 기관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승리라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저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랜 세월 영호남 지역 갈등에 얽매인 사슬을 끊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만들어 가자는 굳은 결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둔 충청인의 진정한 자긍심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만 지금 세상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대우를 받는 세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이심전심으로 충청인들의 가슴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로 당면 문제를 풀어 가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 준 것이 사실입니다. 충청인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한 치의 훼손됨이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극심한 혼란과 불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관해서 현재의 위헌결정이 나서 충청도민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단히 당혹스럽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 기간, 국회에서 입법이 돼서 집행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작년 12월에 법이 제정이 돼서 금년 6월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이 되어 왔고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기대했던 사안이었었는데 그것이 현재 결정이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빨리 이것을 수습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 내에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현재 결정 이후의 후속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중심으로 이것을 수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안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래도 최소화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이 시간 대전·충청인들 사이에는 지역경제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부동산 업종이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파탄이 올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충청인들의 박탈감과 경제 혼란, 치유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지에서 공장을 이전하려고 대토를 구해 났던 분들도 있고, 또 축산농가들은 어차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대토를 구해서 축사를 지으려고 준비했던 분들도 있고, 또 이사 가면서 새로운 집을 장만했던 분들도 있고, 대출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 보상비가 나오면 그 돈으로 갚으려고 준비를 했던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만 날리는 수도 있고 이미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잔금이 없으면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중 삼중으로 애를 겪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다른 경제상황이 매우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충청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기대하고 추진해 왔던 여러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80개에 가까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에 대비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전부 차질을 빚음으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해서 여러 지역의 요망 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을 청취해서 이 문제를 가능한 빨리 수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 지역의 경제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큼니다.

○**서재관 의원** 총리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시급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 기강이 이완되면 사회공동체는 혼란과 무질서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국민이 고단해집니다.

지난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 사건 이후 국민들은 아직도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치안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신용불량자 양산, 한탕주의 만연, 성 윤리 의식의 붕괴, 인터넷의 역기능 등 사회병리 현상의 심화에 따라 잠재적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사회병리 현상의 해소,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경각심 고취 그리고 무동기 범죄요인의 체계적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범죄는 진압이나 검거보다는 예방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 비용 면에서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모두가 범법자 검거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범죄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가 발족되어 범죄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나라들도 범정부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병리 현상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기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의 진압이나 검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검찰·경찰 수사기관 관계 대책회

의를 통해서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주로 예방을 위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민생치안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를 충분히 더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저는 그 상설기구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서재관 의원** 다음, 테러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제 테러조직인 아이만 알자와 히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공격을 촉구하는 내용이 알자지라 TV를 통해서 방송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국민들 간에는 테러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에 국토안보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대테러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고, 영국도 2001년에 테러범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반테러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정비·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2년도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의해 대테러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처에 관련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 통합적인 지휘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대책은 물론 유사시 부처 간 신속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못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에 정부와 여당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테러의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추진해 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정부에서도 테러 방지를 위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입법으로도 테러방지법이 성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평가와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정보 수집·관리하는 기능과 테러 방지를 위해서 집행·실행하는 기능을 가능한 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테러는 외국과의 연계가 많기 때문에 대외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관리와 집행이 가능하면 일원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는데 우리의 지난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또한 매우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보 수집·관리와 집행 기능을 이원화해서, 그러나 유기적으로 신속한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알겠습니다.

또 외국과의 정보 교류, 테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신속한 상호 협조, 합동훈련 등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긴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적 대테러 대응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대테러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또 요즘 나오는 것을 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테러수법 이런 것들이 매우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나라의 정보 수집능력이나 대응만 갖고는 이것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특히 우방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술수준이나 정보공유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관 의원 총리께서는 잠시 들어가시고, 행사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테러 업무는 국가안보와 국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신인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테러 예방과 대응태세를 갖추어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청의 대테러 부서를 보면 고

작 경찰청 대테러계에 5명의 인력이 있고 전국 5개 지방에 특공대가 있을 뿐 지방청 등에는 전문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대테러 전문인력의 증원을 행사부에 요청했는데 행사부에서는 그 3분의 1 수준인 48명만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테러 전문인력 증원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지금 지방 6곳에 경찰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러시고……

제가 이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특공대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 금년에 제주도에 특공대를 하나 다시 창설하고 경찰인력이 늘어나는 것 중에서 일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수는 태부족입니다. 앞으로 장관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알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다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까마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 동맥을 마비시켰던 1월 25일 인터넷 침해사고 이후 금년 5월 13일 국가기관 PC를 대상으로 현대판 트로이 목마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프로그램이 우리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 원자력연구소, 국방연구원 등에 있는 211대의 PC를 해킹해서 국가정보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조직이 개입된 국가안보 위협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난 9월에 제정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반 분야의 위기상황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최근 5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 해킹사고 발생 추세를 보면 지난 2000년에 102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625건으로 6배 이상 증가·발생했고 금년 9월 말 현재 벌써 25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발생한 해킹사건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10개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피해내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연 그때 국가기밀사항이 유출된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해킹사건으로 인해서 국가 및 공공기관 PC 235대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해양경찰청, 국회, 원자력연구소 등 13개 기관의 PC 235대입니다.

다행인 것은 해당 PC는 인터넷용으로서 정부내의 업무망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가기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종 발신지 IP는 중국으로 확인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더 밝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각심을 더 가지고, 해킹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정부의 주요 전산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비를 하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당시 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날 전 세계가 소위 제4의 영토로 불리는 사이버전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13일도 우리 국가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쟁 개념으로 보면 국가 방어선이 무너지고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새로운 사회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을지연습 기간에도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해서 민·관·군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진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국가안보하고 관련된 영역과 관련해서는 NSC, 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되는 새로운 영역이고 기술 개발과 시설장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안전 업무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해킹 분석 기술을 더욱 개발해서 사이버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사이버전쟁, 특히 국토방위 개념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 대한 국토방위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갈등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향한 문턱에 서서 성장과 분배, 시장과 정부,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놓고 유사 이래 가장 치열한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건설, 경인운하 건설 그리고 최근의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이해단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이러한 조정 역할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오랫동안 걸쳐서 미해결 상태에 있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국민들은 누적된 갈등 피로감에 지쳐 있고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회적 갈등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 또한 국민의 걱정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정부 기능이 둔화되고 개혁 지체 등의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일정에 쫓기듯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온 정책결정 방식과 갈등이 악화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우리 사회가 소득이 1만 3000불 수준인데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만 불에서 2만 불 시대로 갈 때까지가 사회갈등

이 가장 심하다고 그러합니다. 1만 불 때까지는 직업이 주어지고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해소되어 나가는데, 또 2만 불이 넘어서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회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그러합니다. 1만 불에서 2만 불 사이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로 그 시기에 진입해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응변적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다 보면 더 꼬여 가지고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참여정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정책의 민주적인 결정 과정,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재관 의원** 미국의 경우 1990년에 소위 행정 분쟁해결법이 도입되어서 각 행정기관은 대안적 분쟁 해결, 소위 ADR 기법을 갈등 해결의 주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분화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와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죽 논의해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갈등 관리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로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을 각 단위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화하는 하나의 기법이라든가 성숙한 절차, 기법, 이런 것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어서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정부 내에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상황 판단에 필요한 것은 지원도 하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갈등관리기본법 위에서 갈등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빨리 작동되도록 하고 각급 위원회에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다행히 기본법과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속히 이루어져서 국민이 화합된 속에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 잘사는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는 혁명이 물리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개혁은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개혁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은 따라오면 된다는 식의 개혁은 지나친 이상에 치우쳐 국민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맙니다.

또한 개혁은 국민 생활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안정은 사회간접자본이자 경제를 비롯한 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이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려운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서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에는 세 분의 질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두 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부의장 김덕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대통령 해외순방 환송 행사 관계로 오후 5시까지 차관이 대리출석을 해서 답

변을 하도록 의장께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용인을 한선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15총선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제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오늘의 국회도 역시 여러 의원들의 갈등과 야유 속에서 회의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 국회부의장의 행정자치부장관의 대통령 환송 행사 참석으로 인한 차관의 대리출석에 대해서 이것이 관례라면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대통령이 외국을 가는 데 있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 앞길을 터 줘야지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관례라면 제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 마음속에는 그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러한 관행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야유를 보내셨습니다만, 그 마음 다 이해하고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 지역 유권자들은 저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제발 당선이 되면 국회에서 싸우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싸우는 국회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 무소속 의원들과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여야의 상생정치 그리고 협력의 정치는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됐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열린우리당 그리고 기타 의원에게 여러 가지 협조와 이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소망은 보름 전 산산이 깨지고도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야 갈등이 아니라 오만불손한 총리의 망발에 의해서, 그래도 지난 날 사회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국회의

원이 되면 국회의원 한번 잘해 보겠다고 결심했던 이 초선의 꿈은, 정의채 신부님의 표현대로라면, 인간의 극심한 곁여와 부분만을 볼 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과 인품이 없는 총대총리의 소아병적 영웅심에 의해서 산산이 깨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는 여야의 대립이 아닌 총리에 의한 국회 파행을 이미 지난 개원국회에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지난 개원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미 야당 경시와 그 특유의 오만함의 전주곡을 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리 특유의 말투 중에는 뽀뽀라니까요, 제가 뽀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뽀뽀하지 않았습니까라는 그 야말로 불경스러운 그리고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말투를 수없이 써 왔습니다. 지난 7월 9일 정치 분야 심재철 의원 질문 때는 15회, 7월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김학원 의원에 6회, 7월 13일 경제 분야 유승민 의원의 질문 때는 9회, 특히 7월 14일 사회·문화 분야 박순자 의원 때는 14회입니다. 박순자 의원의 스물네 문장 답변 중에 반이 넘는 14번을 뽀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은 국회 권능을 얘기하고 국회 권위를 얘기하는 총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말투인지 저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선에 빛나는 의원 출신 총리께서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것이 많아서 총대를 자진해서 메고 계십니까? 소신껏 내각을 책임지시다가 안 되면 동료·후배가 있는 이곳 의사당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의원회관에는 이해찬 의원의 의원실과 또한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을 야당 의원으로서 또한 여당 의원으로서 모든 경험을 다 하신 분이 어찌해서 야당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 끝내고 여의도로 진정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해찬 선배님!

나오시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이해찬 선배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셨는데, 저는 당의 지도부와 어젯밤에도 또한 오늘 아침에도 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어제부터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과의 대화 또한 밤새,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밤새 고민한 끝에 역시 이해찬 총리라는 직책을 가진 분께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정서나 분위기, 또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제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마는 오늘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존경의 마음과 김근태 의원께서 걸어오신 정치역정이 결코 어긋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어제의 연설을 제가 봤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민에 대한 세세한 또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얘기가 겁니다. 그것은 열린우리당 원외위원장 회의에 참석을 해서 동료 정치인으로 말한 얘기이고 비공개회의에서 한 얘기니까 적절하게 사실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선교 의원** 저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국회 파행이라든지 또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내용 중에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해서 국민한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렇지요? 특별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특별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거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그것은 제 자신이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잘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선교 의원** 일반 행정관료 출신이 아니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는 어떠한 덕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저 역시 첫 번째 정기국회 또한 정말 막중한 대정부질문의 임무를 맡고 오늘을 기다려 왔는데 사실 지난 보름 동안 저 역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국회 파행이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인가, 어찌 보면 그 잘못의 소재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국회가 가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지난 보름을 지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국민한테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과연 여기서 우리가 파행의 원인을 좀 따져도 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얘기를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제 생각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보건복지의 한 분야의 어떤 행정관료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이끄는 것뿐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커다란 신망을 얻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국무위원이나 정치인으로서 견해가 있지만 오늘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다소 여러분들의 야유를 받았습시다마는, 총리와 질문을 주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는 우리 여야 의원이…… 이것은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서 파행이 된 것이 아니고 야당과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야 간에 갈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과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야 간에는 우리가 정말 상생 정치를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문할 것이 많았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처음에 관례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을 나갈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관례대로 갔습니다. 사실 오늘 제 뒤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 의원들도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질문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오늘도 다시 여쭙 볼 수밖에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총리가 조선, 동아일보에 대해서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정부가 망하는 관점에서 기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 발언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조선, 동아 두 신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유신 말기의 언론인으로서 유신철폐운동과 언론자유운동을 하다가 쫓겨난 뒤에 80년대에 다시 언론계에 복귀한 저로서는 평소 제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제가 부러 언론을 공격할 필요는 없겠으나 의원님들의 저의 소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신문이 남북 화해와 동서 화합을 저해했다 그러한 저의 오랜 소견을 밝혔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러한 소견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소 이성적인 것보다는, 사실 지난 국회 파행도 그런 이성적인 분위기보다는 약간은 감정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말 단어 하나, 어투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선, 동아일보는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총리로서 적절한 발언인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총리께서 사석에서 하신 발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인 제가 논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먼저 말씀하실 때는…… 행정자치위 국감장에서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님의 질문이 “이 총리가 조선, 동아일보에 대해서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정부가 망하는 관점에서 기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 발언에 공감하느냐?” 질문을 받고 “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총

리 의견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까불지 마라’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선교 의원 행자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께서 같은 의미의 발언을 하셨어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을 두고 행자부장관님과 제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선교 의원 하지만 공감한다는 생각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행자부장관에게 이따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총리의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적절성보다도 총리의 전체적인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제 소신을 밝히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선교 의원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것이 소관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펼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야당을 공격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을 부러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제기했다고 물으신다면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게 비단 17대 들어서라기보다는 제가 15, 16대 국회의원으로 쫓겨보면서……

○한선교 의원 17대를 여쭙 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어느 시점, 어느 의원님들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한선교 의원 요 근래 좌파라든지 색깔론 얘기가, 대정부질문에는 어제부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번 대정부질문뿐만 아니라 선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항용 색깔론을 제기했었다라는 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장관께 다시 한번 제가 정중히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한나라당의 색깔론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당 의원께서 거론을 하셨고, 이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그것도 어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한 장관님의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상화되면서 다소 그러한 말씀이 좀 줄어들 것 아닌가 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줄어들고 있어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양쪽 다, 한나라당에서는 색깔론 또 우리당에서는 수구 이런 발언이 자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좌파다…… 좌파는 나쁜 것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쭙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나쁘지 않지만 쓰시는 의도가 다소 친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에는 불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친북이라는 의미를 배제한다면, 정책이 좀 좌파정책이다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저는 레프트, 라이트가 균형을 이룰 적에는 건전하다고 봅니다. 마는 어느 한쪽 당에서 좌파라고 규정짓는 의미의 뜻은 ‘친북, 반미’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듣는 당에서는 매우 귀에 거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선교 의원** 저희 쪽에서는 정책에 있어서 유럽이라든지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시장경제라든지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의 친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런 쪽에서의 거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매우 건전한……

○**한선교 의원**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뜻이라면 좌우가 균형을 이루는……

○**한선교 의원** 그러한 의미에서 친북 이것보다도 정책에 있어서 좌파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

○**한선교 의원**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 쪽에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구독자, 수요자의 자유 선택에 의한 신문시장이 형성돼서 거기에 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신문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임의로 정부가 개입해서 퍼센티지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언론법이라는 것은 친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친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책적으로 좌파 정책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색깔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책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언론법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므로 여야 간에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법을 두고 좌파라는 공격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선교 의원**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언론법 자체를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맞지 않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니고 여당인데요……

○**한선교 의원** 여당이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언론 선진화와 여론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좌파적인 발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여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 좌익으로 느낌이 주어지는 좌파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 자체가 좌파 정책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좌’라는……

○**한선교 의원** 아까는 “그렇다면 친북의 개념이 아닌 좌파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치학적으로 유럽적인 풍토에서 제기하는 Social Democratic,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좌’라고 하면 그것은 건전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에서 쓰고 있는 ‘좌’ 또 한쪽이 한쪽을 공격하기 위해 쓰고 있는 ‘좌’는 그것이 곧 친북, 반미라는 뜻이

내포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그것은 저도 참으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

○**한선교 의원** 친북을 빼고 정책적으로 좌파정책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앞서 저희 한나라당 의원께서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시다만, 법조인으로부터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판결에 대해 의원에 따라서는 ‘사법 쿠데타’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현재는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선교 의원** 사법 쿠데타로 규정을 하는 의원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그것이야 뭐 어떻게 평가하든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한선교 의원** 장관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쿠데타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저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리 전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법리 전개 방법에 있어서는 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선교 의원** 그건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한선교 의원** 쿠데타는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그러니까 법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소수설도 있고 다수설도 있고 통설도 있고…… 사람이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해 갈 수 있다, 현재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의 법적인 논리를 전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선교 의원** 예, 그렇지요.

또 이러한 표현도 했습니다.

“현재 재판관은 수구·기득권 세력을 수호하는 범복 입은 정치인이다.”

장관의 소견을 여쭙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김승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한선교 의원** ‘범복 입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현재의 구성원으로 봐서 대부분 법관 출신이고, 또 검사로서 오랜 생활을 하던 분들 이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3공·4공·5공·6공 시절에 법관을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우리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각자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그건 자기 운명으로 던져진 삶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선교 의원** ‘현재 위원은 탄핵받기 전에 물러나라’는 발언은 적절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글썬요, 그건…… 하여간 무엇을 질문하시려는지 좀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답답합니다(웃음).

○**한선교 의원** 답답하십니까?

(「대정부질문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 김승규** 본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참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결국은 묻고자 하는 본안이 있거든요. 그걸 저에게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잘 성의 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선교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해찬 국무총리를 모시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가시게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본인이 마음이 상하셨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치의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 것으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 이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총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대정부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총리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한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열린우리당 이목희입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시절 두들겨 맞고 강제 입영될 때의 심경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시절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개쳐질 때도 심경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니다.

지난 10월 21일은 사법상국(司法傷國)의 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하는 것과 관계없이 국민과 국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날입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박정희의 5·16 쿠데타, 3선개헌, 10월유신, 긴급조치 선포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12·12 반란, 5·17 쿠데타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일곱 분의 헌법재판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헌이라는 정치적인 결론부터 내려 놓고 법의 문외한이 듣더라도 궤변투성이의 논리를 동원하여 정치적인 결정을 한 후가 어떨지를 짐작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정치재판으로 누구도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대전 시민, 충청남·북도민들의 좌절과 절망, 분노와 허탈을 상상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밉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정치적인, 너무도 정치적인 결정이 492만 국민들의 노동과 삶, 그 심대한 고통으로 되리라는 것을 정녕 모르셨습니까?

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일곱 분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원들이 좀 품위를 지켜 주세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결정, 아니 사법 쿠데타에 의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무효화되었고 이 법에 기초한 모든 법률적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것이며, 부유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호남을 포위하고 여타 지역과 손잡아 권력을 잡던 세력들이 이제 호남과 충청을 포위하고 여타 지역을 선동하여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치 않습니까?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질문을 좀 들어 주십시오.

현재의 결정이 있는 지 이제 3주일이 지났습니다. 각종 언론에는 정부 당국자의 입을 빌려 예정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도시 건설,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정부 부처만의 지방 이전 등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단위에서 검토된 것들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정부의 후속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할 예정이고, 지금 신문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하고는 관계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목희 의원** 예, 저는 위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목적들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홍보 등에서 정부 여

당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집값 폭락, 공동화 등의 거짓 선전,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정치 선동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했던 점을 보충해 가며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일정 기간 후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여 예정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대책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또 의원님들의 견해도 많이 듣고 해서 이 문제는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최종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하고, 또한 앞서 오전에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이미 충청권 지역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는 일 또한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던 각 지역의 요구도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빠르면 금년 말까지 준비를 해서 성안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희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제 앞에 질문했던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님께서 총리를 ‘선배님’ 하고 불러내시고 혼자 말씀을 하시고 그냥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정부를 존중할 때 우리도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여기는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면박 주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충언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목희 의원** 이 글은 지난 7월 13일 대령연합회가 주도하는 국민행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 성명서를 주요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하였습니다.

대령연합회란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예비역 대령들로 구성된 모임같이 여겨집니다.

○**이목희 의원** 이 성명 발표와 광고를 게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혹은 처벌이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지금 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고발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목희 의원** 제가 보기에 이들은 내란과 군사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군인을 보고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군사 반란입니다.

대령연합회가 주도하는 국민행동본부는 그동안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국가적 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해 일부 극우 단체들의 불법 재정 지원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만약에 어떤 다른 범죄행위가 있다면 법률에 따라서, 법질서에 따라서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목희 의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이목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일제 치하에서 ‘천황폐하 만세식’ 보도를 일삼은 것, 말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 독재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력과 야합하여 기자들을 탄압하고 특혜와 권력을 누린 것, 못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90년대 말부터 냉전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지가 된 것, 새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습니다.

언론이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 보도입니다. 그 언론의 입장이 보수이든 중도이든 진보이든 진실을 외면하면 그것은 진정한 언론이 아닙니다.

조선, 동아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연기·공주는 수도가 될 수 없는 땅”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대전·충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불어닥친 투기 광풍” “땅 소송, 갈라선 가족” “신유홍가 흥청망청” 등이라 보도함으로써 대전·충청민들이 투기나 하고 소송이나 하고 흥청망청대는 사람들로 비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신문의 전체적인 그 보도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목, 지금 그런 식의 보도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목희 의원**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이 어느 지역을 폄하하는 보도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목희 의원** 모범답안이지군요.

언론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동아일보는 이를 언론사 사주의 무한대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항의를 간섭으로, 사주의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을 탄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국민의 불행을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또는 정부는 조선, 동아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위·왜곡 보도, 어느 신문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 신청 및 소송 제기 등으로 해서 정당당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목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 터널,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한탄강댐, 경인운하, 부안 핵폐기장 건설, 새만금간척사업, 소각장 건설…… 이 사례들은 2003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회 갈등 24개 현안 중 환경 갈등들입니다. 이는 환경 문제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문제

란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 묻습니다.

장관은 현재 환경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환경부는 경제 부처의 개발 우선주의에 마냥 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께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환경부장관 박결호** 환경 보전과 개발 가치가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상황상 개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환경 보전을 국가 주요 정책에 십분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과도기 상황이 어려운 점으로 저한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목희 의원** 아니, 경제 부처가 밀어붙이는 것이 힘겨운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박결호** 경제 부처도 지금은 환경 가치를 비중 있게 고려합니다마는,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갈등을 느낍니다.

○**이목희 의원** 얼마 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 계획법 중 일부를 고치는 그런 결정을 했지요?

○**환경부장관 박결호** 그러나 환경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목희 의원** 사전 환경성 검토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박결호**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20일로 하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30일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목희 의원** 그러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비상환경회의라는 것을 만들고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항의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박결호**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개발 시책들이 구체화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환경적 현실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가지시고 환경 보전의 철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분들의 충정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시책이, 구체적 사안을 들어서, 과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분들과 공론적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환경단체의 주장 중에 합당한 면이 있으면 정부가 받아들이고 거꾸로 정부의 정책을 성의 있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목희 의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정치세력의 이념적 지향이 수구나 극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정치 세력이 최소한 건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8일 한나라당이 국회 참여를 거부하는 파행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 한나라당 의원의 ‘친북·반미·좌파·사회주의·주사파 정권…… 운운’ 발언, 총리의 ‘지하실 차떼기, 고속도로 수백억…… 운운’ 발언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중도 또는 중도우파라고 하는 정권·정당을,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신자유주의 우파 정권이라고 규정되는 정권과 정당을 굳이 좌파로 몰아붙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 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해방되어” 이런 강령을 내건 정당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그 이유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돌’, ‘파행’이라는 단어가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저는 한나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수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상식적인 보수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개혁적 보수 정당으로 되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과 파행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질문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그래도 질문을 여러 개 많이 했습니다.

(웃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개혁과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을 전진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

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 현재’, ‘수구 현재’에 의해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현재를 들먹이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냉전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공세가 현재의 결정 이후 더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개혁을 무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 화해·협력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수 기득권 세력만이 활개치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냉전 수구 기득권 세력의 공격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화하고 토론하되 원칙과 대의를 타협하지는 않겠습니다. 피땀으로 일구어 온 개혁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는 대장정에 나서려 합니다. 제2의 민주화 운동, 그 성공이야말로 역사의 후퇴를 막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개혁과 민주주의, 남북 화해·협력을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죽을힘을 다하여 전진하고 성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비판과 질책,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이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를 해 주시지요.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입법부에서 삼권분립 원칙의 기초에 해당하는 사법부를 비난하고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발언을

제재하거나 주의 환기를 안 시키십니까?)

알겠습니다. 그전 국회 운영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의사진행발언, 특히 대정부질문이 계속되는 동안의 의사진행발언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불쑥불쑥 이렇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손을 들고 신청하시게 되면 의장석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시면 제가 쾌히 수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난날의 국회 관행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끄덕끄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해 주시지요.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이런 발언을 했으면 의장님이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세요.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이병석 의원, 내려와요! 이렇게 무례하게 하면 어떡하나!)

(○주성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것은 대정부질문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사법부를 모독하고 헌법재판관을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협의를 해 주세요.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이병석 의원, 내려와! 주성영 의원, 내려와!)

(○주성영 의원 단상에서 - 이것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입니까? 대정부질문 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요.)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여기는 주성영 의원 쇼하는 자리가 아니야!)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주성영 의원 단상에서 - 충청도민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쿠데타예요.)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께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또는 신상발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도록 중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그러면 의장님이 제대로 진행을 하세요.)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사법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듣고도 주의를 안 주는 것은……)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의장으로서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고, 다만 절차에 관해서 그런 형식의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아까 마이크 끄신 것처럼 주의를 주세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법부를 공격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나오면 의장님이 적절하게 제지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이병석 의원, 내려와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이 제대로 진행을 해 주세요.)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제대로 진행을 안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 아무 제지도 안 하시니까…… 지역감정 조장하고……)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어떻게 정부 여당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입법부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재판소, 최고 사법부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독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한 주의 환기를 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이병석 의원, 여기가 당신 쇼 자리가 아니에요!)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그 부분까지만 해 주시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세요. 그것을 해 주셔야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내려와요」 하는 의원 있음)

(○이병석 의원 단상에서 -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기본예의입니다. 의장님,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형근 의원 질문하도록 지금 요청을 했으니 나오도록 하세요.



(○남경필 의원 단상으로 오르며 - 이병석 의원님, 그러면 우리가 합의할 테니까 들어가시지요.)

(○이병석 위원 단상에서 - 합의하기로……)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근 의원** 부산 북·강서갑 정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열우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 내용을 들어 보니까 헌법에 의해 구성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 그것도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 헌재다’ ‘수구 헌재다’, 또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총칼 안 든 쿠데타다’ ‘사법부 쿠데타다’……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국기를 흔드는 그러한 엄청난 발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소속 의원이 원고를 내렸을 때 충분히 검토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그대로 하게 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바로 그 뒤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열린우리당이 50%를 넘게 차지하는 17대 국회, 나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11일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 축하 메시지를 통해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성공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튼튼하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은 일부 언론에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이니 현혹되지 말라. 안심하라”고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10만 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50만 명의 생계가 풍전등화로 전국의 식당 주인 3만 명이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생계 수단인 술단지를 던지면서 정부를 성토했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한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더블 덩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17대 국회는 파행 14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국회 파행 이유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정부 공무원인 국무총리의 제1 야당 모독에서 비롯되어 국회 파행 책임 소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의 좌파 공세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총리의 막말 발언에서 본 의원은 이 정권이 시급한 예산 심의나 민생 현안 처리에 대한 절박성은커녕 필요성조차 느끼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천도 반대 여론에 대해 ‘대통령 불신임 내지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며 집권 기간 내내 여론을 무시하고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적과 나를 구분하며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고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현 정권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내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으로 ‘저주의 굿판’ 운운하며 대립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귀중한 대정부질문 시간을 통해 총리나 장관들을 상대로 현 정권에 대한 좌파 또는 좌파 편향적이라며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까지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반동’, ‘꼴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과연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인정했듯이 ‘자신들을 민주화 세력, 진보 세력, 개혁 세력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러 달라’는 집권 세력은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비판적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수구 꼴통, 역사의 반동’이라며 역매카시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냉전은 끝났고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하면서도 7,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굳어진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일관하며 역색깔론을 펼치는 상징 조작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스펀터가 말한 “명백하다는 것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지적처럼 바로 지금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본질과 이념 성향을 감춘 특정 세력이 자신의 강령으로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좌·우파를 나누는 편가르기를 그만두자면서도 민주와 진보 개혁을 독점하며 적대 세력을 규정짓는 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좌파 수구 꼴통 세력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이후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켰으며,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확산시켜 국론을 분열시켰고, 모든 문제를 민주적 절차와 합헌적 질서를 무시한 파괴적 집단주의적 사고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반자본주의, 반기업주의, 반보수주의 세력을 통합하여 기존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 경제 질서나 체제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지배세력 교체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언론개혁 등 이른바 여권의 핵심 과제는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 교체 작업이며 산업화 세력에 대한 청산 작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바로 사회혁명의 시작입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은 평소 법을 하셨는데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헌재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우리가 그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의 최고 법률자문 고문입니다.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은 자주 보고를 하고 또 헌재 판결에 대한 의미라든지 헌재에 대해서 자문하고 또 보고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저희들이 헌재에 지난번 법률상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 제대로 장관께서 보고를 해 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 장관께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제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아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사유재산제도 이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근 의원**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126조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은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안 핵심 조항 중 하나가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사실상 재단의 재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며, 언론개혁법 역시 독과점 개념 위에서 신문사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 제126조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김승규** 제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소관 법률이 아니라서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사학에는 자율성이 있고 한편 또 교육의 공공성이 있습니다. 헌법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약을 가할 때는 우리가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 가치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 즉답을 안 해 주시는데, 뉴스위크지가 2003년 7월 14일 ‘한국은 사회주의인가?’에서 “한국인들이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한다고 발언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노조가 시위를 벌이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중재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새 정부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노조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지적하고, 금년 10월 25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열린우리당의 언론 관계 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지분한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법안 내용이 마치 평양에서 쓰인 것 같다.” “김정일의 간첩들이 서울에서 공작을 해도 그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개탄했는데 왜 외신들이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좌파 친북 운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관께서 그 주무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정형근 의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기가 좀 답답하실 겁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주체사상을 집단으로 교육시킨 사실, 법무부장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제가 좀 불민한 탓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형근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전공노에서 주체사상을 집단으로 교육받은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이 자료집에 보면 전국연합조직위원장 박세길이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나오는데 장관께서는 전혀 보고 못 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형근 의원 문제 있네요. 전공노의 교육 자료를 읽어 보니까 주체사상 중 수령론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주체사상 인간관, 사회역사 원리, 혁명적 군중노선, 계급노선에 입각한 통일전선전술 등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는데 김정일이 김일성 탄생 70돌을 맞아 개최된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문건을 상당 부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근 의원 아시다시피 이런 게 신문에 보도 되면 장관께 검찰에서 빨리 보고가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아마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정형근 의원 바로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국민의 공복이 김정일의 주체사상을 공무원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은 이것도 국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조치하고 우리한테 좀 보고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정형근 의원 환경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음료, 물, 이것은 대개 댐을 가지고 하는데 낙동강만 유일하게 표류수입니다. 강을 그대로 취수해 가지고 오는데, 지금 부산 시민들이 물 때문에, 또 경남도민들 낙동강 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광역

상수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박결호 예, 다른 지역은 다 상류의 깨끗한 댐에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경남 지역은 그런 광역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상류댐이라면 남강댐, 합천댐이 있는데 지역 간 갈등 요인을 뚫지 못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상류에서 물을 빼 가는 경우에는 갈수기에 낙동강 본류의 유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구상은 현재로서는……

○정형근 의원 전혀 아무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부장관 박결호 예, 없습니다.

○정형근 의원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균형 발전……, 가장 중요한 물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부장관 박결호 그래서 낙동강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폐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유량 조절용 댐 운영도 병행하면서 산림이라든지 농경지에서 나오는 이른바 비점오염물 관리도 강화하는 그런 대책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 여기 낙동강은 BOD만 기준으로 하는데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이것도 같이 추가해서 2급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박결호 우선 현재 4대 강 모두 BOD 중심으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개발 여건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COD까지도 관리해 나가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 또 낙동강특별법이나 산업단지에는 완충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나치게 대상을 좁게 설정했는데 이것도 좀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박결호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정형근 의원 김대중 대통령 공약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고 지원으로, 무료로 하려고 했는데 입장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상 면제자가 많기 때문에 약 3분의 1이 현재 사실상 면제자이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것 입장료 없앨 생각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박결호** 지금 입장료가 성인 기준으로 1600원인데……

○**정형근 의원** 그렇습니다. 1600원입니다.

○**환경부장관 박결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국립공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한테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립공원에 가지도 않은 분이 조세로 불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립공원 관리 비용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약 53%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하고 그다음에 국고도 지원하는 균형적 재원 조달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 이것이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이 이래저래 면제되어 가지고 안 냅니다. 실효성도 없어요. 한 220억 정도 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철폐할 계획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박결호**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요금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 하는 측면이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차기 주자 중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외신들이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사회혁명이니 북한 정권의 지지분한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사실을 오인했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조금 넘었는데 3만 불 나라 수준의 복지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예컨대 내년도 시범사업 예정인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중증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에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만, 이 재정이 엄청나게 추계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치매와 중풍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사회보험을 만들자, 여기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도 안 되었고, 그리고 법적 준비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사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정형근 의원** 관심만 갖고 있지 아직 시행은 언제 할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그렇습니다.

○**정형근 의원** 한국판 뉴딜정책에도 보면 연기금을 투자해서 지방국립대 기숙사와 학교를 짓고 보육시설, 노인센터,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육원도 대개 70% 정도 입학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으면 지금 인구 추세로 보아서 나중에 텅텅 비고 아무 생산성과 관계없는 건물들이나 SOC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낭비 요인인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더 정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인 요양시설이 상당수 부족하고요, 또 학교에 기숙사가 필요하고 기숙사를 통해서 총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 연기금의 SOC 투자에 대해서 한 120조 되는 국민연금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주식 투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것 계속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연기금의 중요한 부분이 국민연금이 아닙니까?

○**정형근 의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정부의 경제 부처가 희망을 하더라도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 좋습니다.

건강보험재정 통합, 의약분업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의 지나친 공공성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국가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주의 일변도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요, 근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위생 수준과 보건의료 기술 수준이 발전해서, 뒷받침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 예컨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치료기술을 사용할지, 치료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전부 정부와 심평원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썼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통제에 있어 의사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 싱가포르에도 훨씬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국의 보건의료 기술 수준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한 부분에서 외국의 환자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형근 의원**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4조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01년 이후 5년간 17조 4000억입니다. 부담만 늘고 불만족만 높아 가는 현재 건강보험 의약분업에 대해서 국회 내에 재평가단을 구성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의약분업 시행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 속에서는 많은 불편한 사항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생각입니다.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다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변경할 의도를 가진 재검토는 보건의료 체계에 많은 혼란과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 장관께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택시가 8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그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운영

에 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이것만 해도 전체 인건비의 10%이고…… 제가 한 50억 정도 한 150명 종업원이 있는 버스 운수회사를 보니까 매출액의 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손익분기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장관님들 산하기관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연봉이 1억 2200,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1억 250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 이사장은 1억 5700, 언론중재위 사무총장이 9600, 한국방송공사 임원이 1억 11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억 38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억 3700,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것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예,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책임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CEO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는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근 의원** 좋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 장관께서 국정감사 시에 “동아, 조선일보는 동서 화해와 남북 화해를 저해했고 권력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다.” “동아, 조선일보는 한때는 권력 그 자체였으며, 신문이 특정 정권을 비판할 수 있듯이 개인도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형근 의원** 탈북자 신문 활용 교육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방호 의원이 여쭙었는데 제가 국정감사 때 정보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통일부장관이 “한글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말’지하고 ‘한겨레신문’만 탈북자들에게 주어 가지고 탈북자들이 컴플레인(Complain)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까? 어제 보니까 정동영 장관께서는 어제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동영 장관께서는 다른 신문은 보지를 않습니까? 다른 신문이 한글로 된 것을 모릅니까? 또 ‘말’지는 왜 넣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글썬요, 정동영 장관

이 어떤 신문을 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국무위원들이라면 대강 한국에서 발행되는 중앙지는 다 그냥 훑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의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근 의원 부산의 영화사업 육성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야말로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필수 인프라인 '시네포트 부산' 사업인 영상센터, 부산 종합후반작업시설, 체험박물관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어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예산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동경영화제가 18회째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잡았습니다. 해서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또 한류 확산을 위한 아주 전진기지로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만 후반작업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거의 한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후반작업의 시설을 두는 문제는 문화산업, 영상산업의 분산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형근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우리 태권도가 종목으로 안 되고 가라테가 거의 확정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형근 의원 위원 구성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올림픽 종목의 교체는 2012년의 올림픽을 겨냥해서 2007년에 검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08년에는 종목별 교체가 없고요, 또 우리 태권도가 앞으로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근 의원 자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형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덕규 정형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구로갑 지역의 이인영 의원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독재에서 민주로 반상식에서 상식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이며,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지향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새로운 선택과 주권자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놓여 있고, 4·15 총선에서 민주 평화 개혁 세력이 다수가 된 국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 이른바 '386세대'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세대와는 달리 변화와 개혁 지향적인 당시의 30대를 가리켜 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 운동을 하고 60년대에 태어났다는 뜻으로 세대적 경험과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가치는 386세대를 넘어선 모든 세대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더더욱 몇몇 개개인만이 독점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닙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 타살에 분노하고 호헌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위해 그해 6월 명동성당의 농성에서부터 시청 앞과 남대문과 서울역에서 전국에서 거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시위대 속에서, 그리고 시청 앞을 가득 메웠던 이한열 열사의 장례행렬 속에서 그 당시 우리 모든 국민은 함께했습니다.

1997년의 정권교체와 2002년의 정권 재창출, 그리고 2004년의 4·15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민주 대 독재, 상식 대 반상식의 공방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호령하던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거의 퇴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386세대의 정신은 새로운 무대를 향해 진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진퇴나 특정 세대의 진퇴를 넘어 역사정신의 교체이고 그래서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에게

게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풍요로운 경제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민주화의 성과와 산업화의 성과를 서로 수용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선의의 정책경쟁을 해야 하고, 경제는 근로자와 국민 다수의 자발적 참여를 수용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칙과 정도가 지켜지는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고,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횡행했던 죽고 죽이는 사상과 이념의 공세가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실사구시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좌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 386 주사와 등등의 언사를 대하며 솔직히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정치에 대한 도발이고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한 지적과 비판이라면 언제라도 머리 조아리고 듣고 배우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나는 수구·냉전·보수가 한국 사회의 대안이다’라고 주장하셔도 좋지만 더 이상 평화·개혁·민주를 좌경·용공·반미·사회주의·친북 심지어 북한 노동당의 사주에 의한 행동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죽어 간 동료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통곡으로 자신의 비겁을 달고 일어서서 싸웠던 지난날 민주화 운동의 세대들에게 민주와 평화와 개혁은 여전히 내릴 수 없는 것발이며, 역사 앞에 순결하고자 한 우리 양심의 떨림이고 역사를 향한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과거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언론이 개혁되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서, 독재 안보를 위해서 태생하고 존립했습니다. 형법 정신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을 위해,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이제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합리적 개혁과 건전한 보수로 한국 정치가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제 한나라당도 전향적으로 임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은 해방 60주년입니다. 그 긴 세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일제 참상을 기억하는 우

리의 어르신들이 살아서 역사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관계언론의 시대가 있었고 어용언론의 시대가 명백히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 속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언론의 시대, 정의로운 언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언론은 한발 더 나아가서 사주로부터 혹은 스스로의 특권과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잘못된 언론의 관행과 제도는 고쳐져야 하고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총리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형근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총리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이런 발언의 내용이 “민생은 외면한 채 개혁에 눈이 멀어서 예산 처리의 시급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예산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의원** 정부와 총리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편가르기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역매카시즘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 역색깔론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참여정부는 정책 입안 과정이라든가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느 정부보다도 굉장히 민주적이고 투명합니다. 정책을 비선에서 결정하는 법도 없고 측근들이 비호해서 하는 법도 없고 정부 내의 철저한 토론 과정을 거치고 입법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어찌 보면 효율이 떨어질 만큼 민주적 절차를 투명하게 거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집해서 지배세력의 교체를 꾀하는, 말하자면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행정수도 추진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아주 만개했다 이렇게 저는 느끼

는데,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고 보고, 저희 정부가 실행정수도 이전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설득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 좌파, 사회주의 그리고 친북, 반미, 이런 비판과 비난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형근 의원께서 이목희 의원의 말씀을 지적하신 것을 제가 이제 되돌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문 때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두언 의원의 대정부질문서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은 한국형 폴포트 정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채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실도 다르지만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학살하는 현 정부는 정신적으로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과 다름없는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야당 의원의 정부 비판이라도 자국민들을 수백만 명 학살한 반인륜적 폴포트 정권을 자국의 정부에 비유하는 것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몰상식의 극치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당이 한나라당식이라면 당장 국회를 파행시킬 사안입니다.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자제하고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전신인 원조 한나라당 격인 민정당 시절에 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하였던 점을 상기하시면 오히려 한나라당에게 폴포트 정권의 화살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 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사학의 법정전입금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법정전입금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는 1999년 3%에서 2003년도에 1.9%로 줄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3.2%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도 94년도의 경우 9.9% 정도에서 2003년도의 경우 5.6%로 크게 낮추어졌습니다. 반면에 등록금

과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그러면 법인의 법정 부담금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부담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고등학교의 경우 작년에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 수가 780개교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의 경우 83.4% 수준이고 대학의 경우는 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중 1998년도에는 53.4%, 2000년도에는 46.8%, 2003년도에는 44.6%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학교나 학생들에게 전가시킨 사립대학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것도 건강보험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의 경우에 72개 법인이 그러하고요, 연금의 경우에 52개 법인이 그러합니다.

○이인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금 및 건강보험료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전체 법인 중 26% 정도로 4개 대학 중 1개 대학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고용주 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상식이고 그러나 학교 법인은 교직원의 임면권 등 고용주의 권리는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법인이 져야 할 의무는 학생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부총리께 여쭙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의 퇴직금은 사학연금의 퇴직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들의 퇴직수당 부담금은 누가 얼마씩 부담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실제에 있어서 1992년 이후 매년 사학연금이 236억 원씩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담 규모는 작년의 경우에 1296억 원이며 1992년 이후 총 1조 178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립학교 법인은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현재 권리만



주장하는 식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와 분규 발생에 관한 실태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3년 동안 912개 사립고 및 사학재단을 감사한 결과 드러난 지적 사항은 무려 7821건입니다. 또한 1990년도 이후 연도별 사립대학의 분규 횟수별 현황도 약 79건에 해당합니다.

2003년도 이후 대학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접수된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232건 중에 180건이 사립대학과 관련된 것이고 그중에서 137건이 재단 및 대학의 부정 비리에 관한 민원입니다.

2001년에서 2004년 7월까지 전국 35개 대학교에 대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97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 중에 사립대학은 779건을 차지했습니다. 지적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예산·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이 201건이었고요, 법인 분야 128건, 인사 분야 126건, 연구비 분야 34건, 입시 분야 59건, 학사 분야 76건 등등 시설 분야도 있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받은 사학의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으로 인한 대학의 손실 액수는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1999년부터 2003년까지 37개 사립대학에서 종합감사를 한 결과 횡령 및 부당 집행에 대한 회수 변상 보전 등 순수한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710억 800만 원이며 예산 전용 등 부당한 회계 처리를 다 감안하면 201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인영 의원 이런 막대한 규모의 액수는 일부 대학의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26년간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교가 94개교에 이르고 전문대학은 82개교에 이릅니다. 사립 초중등의 경우는 더욱더 규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 2세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비리와 횡령, 재단 운영의 비민주성, 교원 인사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으로 얼룩져 있는 현실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

고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친인척 중심의 학교 운영, 의사결정 시스템의 폐쇄성 내지는 비리 견제·예방을 위한 통제장치의 미흡 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지도와 감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후 조치만으로는 비리·분규가 차단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이인영 의원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관리·감독의 미흡,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부총리께서 유념하실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학의 재정 상태가 부실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 형태가 사립학교법인에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것이고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율은 2003년도, 작년의 경우에 48.7%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6.1% 수준입니다.

○이인영 의원 참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립대학의 경영 상태를 분석했던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립대학은 전체적으로 운영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재무 활동성과 성장성 역시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지표 중 운영 건전성을 나타내는 운영 비율과 인건비 구성 비율은 3년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부실한 사학을 그대로 방치하다간 정말 학교 파산이라는 끔직한 사태가 발생해서 교육계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의 부실성과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재산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아주 낮은 토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또 경기침체로 최근에 수익사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었다는 것, 저금리에 따라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일 줄 압니다.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능한 한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옮겨 가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컨대 많은 학교가 넓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교시설 결정 부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 처분해서 사실상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행·재정적인 조치를 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율하고 수익률을 대단히 중요한 지표로 삼아서 더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우리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비리와 분규를 막고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가진 책무를 다하고 우리 교육과 나라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비리 예방, 부실 예방,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취지입니다.

주 내용은 첫 번째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여 법인과 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형근 의원께서 위원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이 있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가 대체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얼마간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도의 이사회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의원 두 번째,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핵심 중에 하나는 교육의 자주성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교육기본법 5조2항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가 심의

기구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과 자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부총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사립법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당하다면 각기 이유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중등교육에 있어서 사학의 비중은 제법 크고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8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사학 재정의 대부분은 국가의 재정 보조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중등 사립학교는 사실상 준(準)공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둘 모두 소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공립학교와 비슷하게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부분적 심의기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의 보편적 가치와 해당 사학이 추구하는 특수한 가치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라는 그러한 의식의 발로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건전 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학법인의 재정 안정성과 경영의 투명성, 인사의 공정성, 교육활동의 합리성 등을 평가해서 양호한 학교와 사학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학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질문 내

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의사진행의견

(16시24분)

○**부의장 김덕규**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물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를 거쳐 주십시오.

○**이병석 의원**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돼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도덕적 정당성과 가치규범을 가장 최고로 집약시켜 놓은 헌법기관입니다.

바로 이 헌법기관에 대한 이목회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본인은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목회 의원은 10월 21일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사법상국의 날’이었다고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목회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이 내린 이 결정을 3선개헌, 10월유신, 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5·17 군사쿠데타에 버금가는 것이었다고 강변하면서 헌법재판소를 12·12 군사반란과 같은 사법쿠데타와 같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 입법부 국회의원이 내뱉어 놓은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더구나 이 7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을 수호해 주기 위한 법복 입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모욕적으로 헌법기관의 재판관들을 폄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소는 386세대들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정치적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1987년 6·10 민중항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개

혁적인 2개의 법률 골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제 정치이고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설치였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한 국가에서 국민적 분열 상황이 나왔을 때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하고 조화해서 마지막 최고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 단합을 가져오고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한 국가의 성숙도 있는, 한 단계 높은 대한민국의 내일의 모습을 끌어가는 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목회 의원이 지목한 이와 같은 규정 발언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모독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목회 의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당성을 부인한 국법의 파괴자고, 헌법재판소법을 통과시켜 준 국민과 입법부에 대한 권위를 모독한 반국민적 망동에 지나지 않으며, 국기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변란을 기도할 것으로 추정될 만한 정도의 반국가적 범죄행위로까지도 추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회 의원의 이런 발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데다가 더더구나 호남을 포위하고 여타 지역과 손잡아 권력을 잡던 세력들이 이제 호남과 충청을 포위하고, 여타 지역을 선동하여 권력을 찾고자 한다는 식으로 범죄적 지역감정까지도 선동하는 이목회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목회 의원은 사퇴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의원** 이병석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선출한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폴포트 정권이라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민적 정당성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개인 의원의 견해를 이와 같이 왜곡하고 호도하고 질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14일간의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감정의 골을

뒹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정부를 향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민생과 주요 정책을 따지고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바로 어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출석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국회가 정상화되었을 때, 지난 일들은 어찌되었든 개운하고 신사적인 정치, 이성의 정치,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질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과연 치열한 정책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행 뒤에 감정의 뒤편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리에 대한 질문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에게 질문하겠다고 총리를 불러 세우고 다시 돌아가라고 한 동료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 의원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선교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겠다고 하셨을 때 ‘우—’ 하면서 기대와 탄성을 보냈습니다. 역시 조선 의원이기 때문에 낱아빠진 정쟁의 정치를 끊어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술 더 떴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총리에게 그렇게 해서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대한민국의 총리를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기뻐니까?

망신을 당한 것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행태, 이제는 끊어 냅시다. 이렇게 졸렬한 정치가 계속되는 한 우리 17대 국회도 국민들에게 치열하고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16대 국회에 못지않은 국민적 비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아까 우리당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때 많은 야유와 조롱을 했습니다. 또 우리당 의원들께서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부 소란스러운 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성을 회복합시다. 감정의 정치는 이제 중지부를 찍읍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서로가 이해하고 양해하고, 국회에 들어왔으면 지난 일들은 싹 정리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정치로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선배 의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의원신상발언

(16시33분)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방부 대변인은 바로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 발언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망발입니다.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 발언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검토 빨리 하십시오. 빨리 검토를 끝내고 즉각 수사 의뢰하십시오.

저는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 정부가 중요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그리고 보병 2사단 남하 등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낱알이 우리 국민들 앞에 폭로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거짓말투성이의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이 국방부장관이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달러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국가기밀이니까 수사 의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이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어제

국방부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답변이 허위 증언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됩니다.

국방부장관! 정말 한번 해 보겠다면 해 봅시다. 시간하고 장소만 알려 주십시오.

(장내 웃음)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또 선배 의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정파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정말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좌파 정당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좌파 정당, 지금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왜 좌파 아닌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짝퉁을 가지고 명품이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그리고 짝퉁이면서 명품인 척하는 것도 사기죄입니다. 명품은 따로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제가 오늘 10시에 국회에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국회 입구 철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경비하는 사람한테 왜 이것을 잠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들어올지 몰라서 잠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여기에서 말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국회로 쳐들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불태운 것은 왜병이 아니었습니다. 궁을 버리고 민심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에 대한 분노로 우리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국회?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경찰병력 버스로 철벽을 두른다고 해서 국회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되고 그 정상화가 오늘날과 같은 정상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민심으로 돌아가는, 민심을 듣는 그런 국회가 될 때야만 국회 문을 열어 놓아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같은 내일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덕규 의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그리고 관계 장관 여러분들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다 아시는 바이겠습니다마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의 취지에 합당하게 질문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헌법기관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 상호간에도 서로가 다른 견해를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보다도 수용해 주시는 자세를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헌법기관이나 타 당에 대해서 지나친 용어 사용을 자제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내력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다른 견해를 수렴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2. 사회·문화에관한질문(계속)

(16시39분)

○부의장 김덕규 계속해서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根榮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보령·서천 출신 자유민주연합의 류근찬입니다.

제17대 국회는 출범하면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국민 앞에 모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 지금 헌신짝 버려지듯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과 제1 야당인 한나라당 간의 기싸움과 식상한 정치 공세로 민생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생결단식 상쟁의 정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을 둘러싸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무려 2주, 14일 동안 국회가 공전되는 미증유의 사태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계속 빈말이 되기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이념의 과잉, 또 이데올로기 논란의 격화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제라도 본연의 책무로 눈을 돌려야만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정과 또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야당도 반성을 해야 하고 여당도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소모적 정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바로 오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똑똑히 보셨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극과 극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토론은 물에 기름 섞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시각차의 배경에는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따지지 않아도 될 문제에까지 이념의 갈등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세 겨루기 속에 진행되는 정치적 과장으로 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역동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보는 살벌한 분위기에다가 보수 반동과 진보 혁신의 편 가르기로 대화와 토론, 타협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해방 정국에서 빚어진 좌우 이념 대립 이래 최악의 사회분열 양상을 띠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이진투구만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에는 ‘플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의 정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등을 거치면서 결국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깨달음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적대감을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양보심, 플레랑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몹시 지쳐 있습니다. 말로만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줄다리기만 해서는 한 걸음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그 명칭에 걸맞게 천심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더 늦기 전에 변해야만 합니다. ‘내 탓이오’ 운동이라도 벌여서 상생과 공존의 길을 열어 나가야만 합니다. 사회 구조를 선과 악, 적과 동지의 게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아우르고 또 치유하는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연한 입

장에서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큰 정치를 해 주기를 간곡하고 간절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념적 양분 현상,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 조장해 가지고는 국민 통합이라든지 국가 발전은 요원한 일이라 이렇게 보는데 정부도 아마 그 심각한 실상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 정부의 입장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념적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냉전시대를 오래 겪어 왔고 또 탈냉전의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체제가 다른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역사에서나 다 있습니다. 그것은 또 있어야 그 사회가 두 바퀴로 굴러갈 수 있는 하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은 그런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와 보수 개념이 아니고 순수하게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념적 논쟁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맞지도 않거니와 시대적으로도 이제는 굉장히 뒤진,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유럽에서도 정당에 따라서 예전에 냉전시대에는 좌파와 우파 간에 정책적인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좌파들은 철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을 가능한 국유화를 하려고 그랬고 우파들은 그것을 민영화를 하려는 역사의 반복을 오랫동안 해 왔지요.

우리 사회에서 요새 좌파라고 보통 얘기를 할 적에 우리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EU의 여러 국가들은 그것을 자연히 연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민영화되어 있는 공기업을 국유화하려고 하는 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민영화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역사가 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좌파 논쟁이 벌어짐으로써 우리한테 최대의 투자국인 EU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공기업 주식 매입이라든가 투자 선택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외신의 보도가 그분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투자 환경을 아주 나쁘게 만든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根榮 議員 그러니까 이념의 골을 치유하기 위한……

○국무총리 이해찬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복지비의 증가, 이 부분을 좌파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복지비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1998년도 환율이 아주 높았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9% 정도 되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대개 15~30%의 GDP 대비 복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덕규 부의장, 김원기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념논쟁을 자꾸 벌이는 것은 이 문제를 치유하는 방향이 아니고 정책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의견을 접근해서 토론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정책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정치권의 논쟁은 대단히 이념적 양분 현상을 오히려 호도하면서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번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쪽에서는 이런 이념적인 논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지금 정당 간에만 있는 편입니다. 학계에서도 없고 정부 내에서도 없고 기업체 내에서도 이런 논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 내에서 혹은 의정 단상에서만 이런 논쟁이 있다는 점을 판단해서서 양당 간에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은 이제 지양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柳根榮 議員 총리께서는 잠시 후에 질문이 다시 있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저 역시 당혹과 충격을 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헌판결로 촉발된 분노가 지금 충청인의 자존심으로 비화되면서 투쟁 전선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고 머리를 삭발한 채 거리로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정부, 열린우리당 어디에서도 아직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이한 대처이자 충청인들을 엄동설한에 계속 거리로 내몰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행정수도 이전이 개헌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취지나 당위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책임을 현재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또 철석같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있던 충청도인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을 대로 불어넣고 나서 이제 와서 바늘로 쿡 찌러 버리면 도대체 어찌란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현재나 또 일부 야당에 돌리고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도를 즉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싶겠지만 우리 500만 충청인들은 그 어떤 기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노 대통령과 여당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적 동의 없이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계획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무능의 극치일 것이고 알면서 강행해 왔다면 이것은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대충청권의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감히 단언합니다.

처음부터 훨씬 더 성실한 자세로 수도 이전 정

책을 추진해 왔더라면 일이 이 지경으로 될 때까지 상황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수도권과 야당이 반발하고 나설 때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치적 몰아치기로 일관했습니다. 누가 요구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신임과 연계해서 찬성은 내 편, 반대는 네 편, 이렇게 갈라놓고 지지도가 30% 안팎인 대통령의 반대자들을 행정수도 이전 반대 세력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급기야 그 세력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무슨 행정타운이니 행정도시니 행정특별시니 하는 대안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생각은 또다시 충청도 사람들을 농락하려는 기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선택은 단하나,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필요하면 개헌을 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내서 약속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공룡 같은 수도권, 서울이 대한민국인 이 불균형을 가지고 과연 장차 대한민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지금 이쯤에서 국민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제16대 국회의 제1당이었습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선거 기간 내내 충청도에 와서 행정수도를 반드시 옮겨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직후에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고 한술 더 떠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사사건건 탄지를 걸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 만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심 어린 사죄,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찬성 당론을 모아서 원안대로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커튼 뒤로 숨어서 꺾속말로 속삭이는 일체의 대안 논의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수도 이전을 원안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고 머리를 쥐고 거리로 나오는 충청인들에게 석고대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현재 판결 이후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지금 이 문제를 관계기관 대책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정부 내에서는 지금 벌써 시작했고 다음 주에 후속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柳根榮 議員 지금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대책입니까, 아니면 대안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결론적으로는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현재 결정의 취지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결론적으로는 맺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柳根榮 議員 대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계획의 무산이라든지 포기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원안대로의 계획이 포기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한 것을 정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복할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국민투표만 가지고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개헌까지 가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되고 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柳根榮 議員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지 않습니다.

○柳根燾 議員 왜냐하면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299명의 의원님 중에서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의석 분포상으로 봐서 200명의 동의를 받아서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하겠습니까만, 그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그것만을 기대하고서 이 문제를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현재 충청권에는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다라든가 대체농지를 구입했다라든가 대체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라든가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이것은 충청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국가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을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최종적인 정부안을 가지고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根燾 議員 지금 충청도 사람들의 요구나 주장을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柳根燾 議員 어떤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충청도 분들의 요구는 아주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개헌을 해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견해도 있고, 현실적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대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아주 실망해서 가지고 아예 허무주의적인 사고를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이것은 충청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중앙을 집권하는 지역 세력이 전면적인 지배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참여정부에서는 관점을 바꾸어서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화를 시켜서 분권화가 골고루 됨으로써 중앙을 둘러싼 권력 다툼의 강도를 낮춤으로써 국가를 균형발전시키려고 하는 시각의 전환 속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환입니다.

이 점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을 통해서 균형도 잡고 각 지역 간에 적절한 공기업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간의 균형도 기하는 정책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를 반드시 실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根燾 議員 충청도인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없는 약속을 했고, 특히 지난 6월 15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행정수도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 바로 신행정수도 이전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만들 때부터 제가 깊이 관여를 했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지금도 제가 책임자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바로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핵심과제가 지금 현재 결정이 남으로써 정부로서도 아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정의 기본취지가 국가 균형 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수도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의 내용을 얼마만큼 잘 채움으로써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柳根燾 議員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질문한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가지고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이 문제는 현재 결정만 아니

있으면 지금쯤은 토지 세목조사가 끝나 가지고 내년부터는 토지 매수작업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돌출적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원래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는 취지의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根燾 議員** 직접적인 말씀은 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정수도가 성사되면 정권은 그냥 갈 수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가 안 되면 정부가 퇴진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柳根燾 議員**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柳根燾 議員** 물론 강력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임에는 틀림없지만 문맥을 보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정책의 추진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다 돌출변수, 암초에 부딪었다고 해서 정공법을 취하지 않고 우회해서 어물쩍 다른 정책으로 이것을 변질시키려는 기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국가 균형 발전인데 그 균형 발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정책을 다시 재조정해서 행정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내용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적 목표와 충청권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실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柳根燾 議員** 지금 총리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행정수도가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는 올인을 해서라도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행정수도 이전의 정책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당장 국민한테 보여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의지의 천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는 500만 충청

도민들, 손을 깨물어 혈서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한 충청민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빠른 시일 안에 천명하는 것이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빠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柳根燾 議員**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질문에 앞서 파행국회를 경험한 초선 의원의 마음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국감을 통한 기대와 희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회는 파행되고 의사당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파행 기간 동안 국민들의 질타가 빗발치고 산적한 민생 개혁 현안들은 의사당에 뒹구는 은행나무잎처럼 쌓여만 가는데도 우리는 마냥 기다렸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 앞에, 유권자 앞에 “여러분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새로운 정치를, 민생을 챙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싸움질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방, 비난하겠습니다’ ‘국회를 파탄시키고 파행으로 이끌겠습니다’라고 누구도 약속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지키기에는 늦었습니다. 단언하건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늪이 너무 커져서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국민들은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2주간 파행이 거듭된 이후에 시작된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또 국민들은 확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지난 파행도 그렇고 오늘도 잘못된 질문에 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 하면 의사당 문을 박차고 나갑니까? 왜 특 하면 의장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섭니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국회에 복귀하면서 총리에게 질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에게 질문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태엽입니다.

좋습니다. 질문을 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총리를,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놓고 인신성 발언 공격을 해 대는 것입니까? 늘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술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6개월 내내 있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실 의원님 자료집에,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폴포트 정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정형근 의원께서는 의회를 해산하라고 그러십니다. 사회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케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불안스럽게 선동하고 있습니까?

의장님께서 이제 자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의사진행발언 겹쳐서 한 말씀 드리건대 다시는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놓고 인격적 모독을 하고 태업을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이 대정부질문의 이 자리가 만약 방송 출연용 무대라고 생각하신다면 코미디는 코미디 프로에 나가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국민의 목소리로 전달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판자촌, 쪽방, 노숙자, 저소득층에게 다가오는 겨울은 매섭습니다. 특히 빈곤층 노약자에게 겨울은 생존마저 위협합니다. 이 빈곤층은 성장의 그늘이라고 봅니다. 이를 치유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않고 이 사회는 보다 나은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래서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두고 한나라당에서는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배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서 우리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고 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국민 간에 소득격차도 커졌고 사회적 격차도 많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국민의 정부 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인 3%를 최저선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 위의 상위 7%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비용으로 본다면 멕시코를 빼고 제일 낮은 국가입니다. 약 9% 정도인데 다른 OECD 국가들은 15% 내지 30%의 사회복지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 본다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3%, 그 위의 7%를 합쳐서 약 10%에 해당되는 450만쯤 되는 계층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보호를 하느냐, 안전망을 갖추어 주느냐가 개방된 시장 경쟁 체제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시켜 가면서 그러면서도 어려운 층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안전망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참여정부에서도 그 방향에 맞추어서 최대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나쁠 때일수록 이 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년, 내년까지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각별하게 안전망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고맙습니다.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67개의 복지사업 내용을 지방 이양으로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자치와 분권의 정책으로 참여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복지사업의 경우 지방 이양 이후의 관리대책이 충실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복지수요가 차이가

있는 데 비해서 서울이나 서울이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지켜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의 여러 가지 재정 수준이 다르고 행정의 집행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양을 해서 자율성, 책임성을 갖고 잘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보조율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을 잘 갖춰야만 이것이 투명하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방에다 다 넘겨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자기의 선거에 이용하는 차원에서 남용하거나 잘못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칫하면 그렇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이것은 자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안정화시키고 정착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국가가 집행하다 보면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으로서 갖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율통제시스템, 차등보조율 이런 것을 잘 강화해서 자율성을 주되 책임성이 확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복지 분야에서 지방이양정책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내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행자부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조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명확한 총리의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SBS 윤세영 회장이 90년도에 SBS 지역민방을 허가받으면서 국민을 향해 방송사 매출액 세전이익 15%를 사회에 공헌기금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속기록에도 확인되어 있고 당시 모든 언론에 생생히 보도되고 있었습

다. 그때 총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요, 이 중에 상당 금액이 아직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불이행이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작년 부터 방영된 ‘물은 생명이다’라는 연중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태영이 하수처리사업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뭔가 의혹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SBS방송이 허가받을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것은 방송위원회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은 정부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방송위원회에 대해서는 감독권이나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방송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사업을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와 연계해서 SBS의 최대주주인, 출자자인 분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관련해서 사업을 따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부당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수처리사업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이 요청하신 바대로 저희가 감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정부는 이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은 액수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도입됐던 88년 당시 3%를 내고 70% 가까이 탔던 이 정책이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두 번 바뀌고, 최근 들어서 9%의 보험료를 내고 60%의 지급률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또다시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률을 낮춘다고 하는 데에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가 미

래에 받지 못하고 고갈되지 않겠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욱 수백조 쌓여 가는 이 연금재정의 운영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의무가입을 제도화하면서 큰 불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불만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국민을 안심시켜 줘야 한다고 봅니다. 연금지급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민연금제도는 실제로 노후보장제도다라고 장관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확신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략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6년에는 20%가 넘어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이런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가난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은 합리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짚은 제도의 변경이, 또 소문과 풍문이 잘못 전해져서 재정이 고갈되어서 혹시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의원입법으로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이 발의돼 있는데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국민연금 문제는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대 정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제안컨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소해 나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2003년 현재 145만 명,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가구가 170만 가구에 이릅니다. 어렵습니다. 이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의료빈곤층이 점점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들을 감당할 우리 정부의 공공 부문의 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장관은 언제, 어떻게 이 계획을 발표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말까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연말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의료체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이나 응급의료,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중산층과 서민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요양과 어린이의 긴급대처를 위해서 요양기관과 어린이병원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선진국은 대략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70%에 달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의 발전이나 빈민층과 빈곤층, 신빈곤층의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종합계획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와 각종 특구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문제가 많이 요구되고 거세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주의 경향 속에서도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정책을 확고히 분명히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정부 내에서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북아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동아시아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 병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문제 이것이 재경부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활발한 토론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내국인 진료 문제와 영리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함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경제특구를 만들어 가자

는 데에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구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60년대는 “덜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런 구호였습니다. 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 90년대에는 “둘도 많다.”, 최근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1.19%로 전 세계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비상을 걸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처를 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5 수준이었던 90년대 중반에도 “둘도 많다.”였고 1.2까지 떨어졌던 최근에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도 늦게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며, 특히 앞으로 늦었지만 범정부적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의원님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셋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에서 맨 밑바탕을 점하고 있고 대략 1983년도에 2.1명이었는데 20년이 지체가 되어서 이제서야 국민적 의제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단순히 노인의 가난과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패러다임을 개선해 갈 것이냐,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것이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의 심각함을 국민의제화하는데 의원님과 더불어서 정부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로서 피임을 하는 것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복원수술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했고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심각하고 진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강기정 의원 셋만 낳아 잘 키워 주십시오.

다음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A 사건 이후에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의약품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부적합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안전성에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PPA 감기약 파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1만 불을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위생 수준의 발전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PPA 감기약 파동을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 내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지요.

작년 주기적으로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아 혈액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혈액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발적으로 헌혈했던 국민들의 자발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지금까지 일회성, 20대 30대 남성 중심의 단체 헌혈을 계속하면 장래 혈액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서 재난적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헌혈 인프라를 제대로 건설하고 이것을 위해서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서 확고한 재정 충당을 하겠습니다. 또 헌혈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혈이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가의 발전에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혈액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본부, 식약청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고 통합하고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를 통합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12·12와 5·18 관련된 수사기록 정보공개 내용을 발표하셨지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오늘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오늘 발표 내용을 저도 조금 전에 들었더니 총 9만 쪽 정보공개 중에 7만 쪽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개 원칙을 보니까 연대장급 이상의 진술을 공개를 했는데요, 정작 중요한 정보는 중대장 소대장급에 있는,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데에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장관 김승규 기록 공개에 관해서는 한 달간 팀이 짜여져 가지고 깊이 검토해서 어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중대장, 소대장급 진술서나 정보도 공개돼야 할 것 같고 군 작전일지나 군 지휘관 메모 등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공개한 자세한 기준은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강기정 의원 오늘 5·18 관련 정보공개 중에 최초 발표자는 알 수 없었다 이런 식의 검찰 발표도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만약 그런 발표가 있었다면 이것은 검찰의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추후에 확인하셔서 월권이 없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나 지금 참여정부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되도록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승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무위원과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붕와해(土崩瓦解)입니다. 흙이 무너지고 기왓장이 깨진다는 의미입니다. 작금의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런 형국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복지정책에 힘을 합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이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주호 의원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최악' '위기' '붕괴'와 같은 단어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하고, 안보가 위기라고 합니다.

오늘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인권을 명분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여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개선을 요구하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가장 절망적인 심정으로 듣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붕괴입니다. 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우리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뒷받침을 해 준다면 우리의 미래만큼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은 하향평준화, 관치와 무책임, 정치의 강이라는 세 가지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의 교육을 이러한 함정에서 건져내기는커녕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붕괴되는 교육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입시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안 부총리께서 확정하여 발표하신 2008년 입시제도는 기본적으로 수능시험을 9단계화하여 변별력을 낮추고 대신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맞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런데 사실 이 방안은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장관 재직 시에 입안하였던 2002년 입시안과 기본적인 철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찬 총리가 '02학번 이해찬 1세대 문제'를 초래하고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8년 대입안도 현재 중3 학생인 '08학번 이해찬 2세대 문제'를 초래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대입안은 2002년 대입안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능시험에 대해서는 변별력을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능시험 따로 학교 공부 따로 하는 식의 수능시험과 학교 교육 간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두 번째로 내신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대학이 고교 간 학력 차이를 감안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 없이 어떻게 2008년 입시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의 축이 지금 학교 밖으로 너무나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 안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수능의 변별력을 조금 낮추고 대신 교과과정 중심의 내신성적 중심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은 좀 줄어들 것이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보다 정상화되고 내실화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주호 의원** 그런데 내신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결국 학력 차이를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면 대학으로서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학력 차 혹은 학교 차, 교육 여건의 차이는 어느 시대나 얼마 간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와 같은 자기 선택의 진학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의해서 개개인의 성적을 같음하는 이런 식의 학력 차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주호 의원** 물론입니다. 저도 단순히 학력만을 서열화해서 하는 고교등급제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일단 고교등급제는 금지하고 내신은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대학들이 과연 어떻게 내신을 강화하라는 말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학으로서는 사실상 대안이 꽤 있습니다. 우선 새 수능등급제가 과거보다는 변별력이 조금 약해졌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적절한 수준의 변별력이 있고요, 그리고 내신성적도 사실상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적 9등급제가 꽤 활용할 만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상 심층면접이라든가 혹은 논술고사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호 의원** 제 생각에는 부총리는 지금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주호 의원**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런데 사실 2002년 대입안이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지요.

○**이주호 의원** 설명하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시겠습니까만 2002년 대입안이 실패했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다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추구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수시 입학이 37%, 특별전형이 43%에 이를 정도로 다양화·특성화되었고, 3불 말고는 대학의 자율성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만 문제는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서 내신성적의 실질 반영률이 너무 떨어지고, 대학이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능시험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의 변별력을 좀 낮추고 이 축을 학교 안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목적입니다.

2002년 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발전한 것입니다.

○**이주호 의원** 2002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것이 2008년 대입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주호 의원** 제가 거듭 지적하지만 학교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변별력을 무조건 낮출 경우에는, 이해찬 장관 시절에 수능을 무조건 쉽게 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똑같은 학력 저하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고, 지금 부총리께서 원하시는 과외를 줄이겠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는 바로 학부모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연구 과제를 통해 가지고 대학 수능시험의 현 9등급제를 오히려 20~30등급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안들이 존재하고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왜 2008년 입시제도를 2005년 입시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렇게 급속하게 밀어붙이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경제계랄까 이런 쪽에서는, 또 일부 일부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13~15등급, 혹은 20등급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반대 극에서는 아예 수능시험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내지는 5등급제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저희들은 9등급제, 스탠나인(Stanine)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정도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가장 안정적인 통계학적인 근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주호 의원** 지금 안정적인 통계적 근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물론이지요.

○**이주호 의원** 그래서 정부는 과연 이 중대한 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얼마나 여론 수렴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논의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 교사, 교장선생님들, 교육감님들, 대학 총장님들, 조직 단체와 수많은 여론 수렴과 정책 토론을 하고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졸속으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이라도 2008년 대입안을 백지화하고 보다 장기적인 토론과 검토를 거쳐 가지고 새로운 입시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교원노조 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교원노조의 역할을 냉철하게 평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동의합니다.

○**이주호 의원** 부총리께서는 교육부의 '교원노조에 관한 허가지침'에서 교원 노조 전임자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임자가 너무 오랫동안 학교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이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런데 올 2월에 일부 선출직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전임자 기간 5년의 제한 조건에 걸려서 노조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지침의 조항을 개정해서 특례를 두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맞습니다.

○**이주호 의원** 현재 전교조에는 총 108명의 전임자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고 있습니다.

○**이주호 의원** 이 특례 조항에 의하면 선출된 전임자는 교사의 신분일지라도 7년이든 10년이든 직업적인 전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의 노조 활동을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조합원 전체에 의해서 혹은 조합원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노조위원장을 사실상 우리가 지침으로 전임자 불허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례 조항을 둔 것은 노사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안목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주호 의원** 저는 이런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에서조차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교원노조의 특정인에게 편의를 봐주고 그렇게 끌려 다닌다면 우리의 교육은 더욱 정치화되고 교단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감 활동을 통하여 학교별·지역별로 큰 학력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고 있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학력평가를 기피할 뿐만 아니고 학력 차에 대한 자료조차 철저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학업성취도에 대한 원자료를 그냥 공개하는 데는 없습니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고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력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져다 줄 사회적인 파장을 염려해서 원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주호 의원**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업 성취도 조사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고 있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 원자료를 공개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원자료를 그대로 공개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개 안 했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런데 그하고 비슷한, 유사한

미국의 자료가 있습니다. 원자료를 공개합니다.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은 그 원자료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전국 수준의 학업 성취도 조사는 사실상 미국에서도 그냥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주호 의원** 아니, 제가 지금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를 특정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를 한단 말입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공개하는 그런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료라고 해서 이것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조사는 그 조사 목적에 맞춰서 디자인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연구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냥 원자료를 갔다가 드릴 경우 이것을 잘못 왜곡해서 연구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것이 교육부의 걱정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렇지만 그것은 교육부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료가 공개되면 그 자료를 이용하는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활용되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됩니다. 교육부가 미리 그것을 예단해 가지고 ‘이 자료 공개되면 안 되고, 이 자료는 혹시 연구자들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절대 공개를 못 하겠다’ 이것은 매우 후진적인 발상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나라의 예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 철저히 파악하시고 이 자료 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교원노조법 제6조에 교섭 및 체결 권한의 대상으로 “조합원의 임금·근무 조건·후생 복지 등 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

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고 있습니다.

○이주호 의원 또한 부총리께서는 2003년 단체교섭 시 교원노조의 10대 요구 사항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사실입니다.

○이주호 의원 그러면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가 교원노조법 제6조에 제시하고 있는 임금·근무조건·후생 복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요한 교육 정책은 이 3개의 조건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결이 된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주호 의원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주호 의원 제가 그러면 다시 물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원노조와 교육부와의 단체협약 합의문에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단체협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단체교섭 외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단체교섭 외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교조도, 교총도, 한교조도 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교육 정책 문제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합의의 폭을 넓히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봅니다.

○이주호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교원노조와도 충분히 대화를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체협상이라는 법적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데 전교조하고 교총이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주호 의원 제 말씀 들으십시오. 단체교섭이라는 그 법적인 테두리 바깥에서 왜 단체교섭 외의 합의 사항이라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문건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서로 합의한 것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주호 의원 지금 그 합의 사항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의 사항에 보면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교원노조와만 합의 사항으로 하여 체결할 내용입니까? 정책 전문가들, 학생들과 학부모들, 각종 교원 단체들과의 간담회·토론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단체교섭 외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 기회는 어디에도, 어떤 단체에도 열려져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많은 단체와 이런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만 특권적인 입장에서 기회를 드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주호 의원 안 부총리께서 NEIS 사태를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고 있습니다.

○이주호 의원 NEIS와 같이 중차대한 사항을…… 이것이 단체협상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것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국무총리실에……

○이주호 의원 대답하세요. NEIS 사항이 단체협상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단체협상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주호 의원 단체협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단독으로, 그것도 열린우리당 한 의원실에서 합의문까지 작성한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실에 있었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사실상 전교조뿐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 등등이 포함해서 이 문제를 논

의하고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과정에서 기간 문제와 연관해서 전교조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마저 해결하기 위해서 전교조하고 세부적인 토의를 한 것이고, 그것을 밑실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학술정보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기관과 함께 합의해서, 거기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들 기관이 함께 참여했고 기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 이것은……

○**이주호 의원** 부총리께서 지금 변명하고 계시지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변명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주호 의원** 들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우리 현 정부가 교원노조 정책에 대해서 과연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원노조 정책을 이렇게 소신 있게 중립적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학교현장이 정치화되고 교단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비리와 부패가 발생할 소지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찬성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는 공공성·투명성·자율성 이 세 가지를 함께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의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제기된, 오래된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안이 없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도 안을 만들고 세련되게 다듬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당·정이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당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도 정부안하고 당 안 간에는 얼마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주호 의원** 사립학교법의 교원임면권에 대해서 교육부가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에 '사립학교법은 원칙적으로 사립학교의 권한 자체를 박탈할 수 없다' 하는 자문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주호 의원**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은 법률적인 자문을 여러 쪽에 청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문제는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유보를 하고 교원들의 채용에 절차적인 합리성 쪽이 강조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사립학교의 권한 자체를 박탈할 수 없다 하는 이 내용을 존중하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일종의 위험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습니다.

○**이주호 의원** 같은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사립학교의 학사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이사회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열린우리당 안역시 사학의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데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사회에서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학교장을 사실상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권이나 혹은 징계권 등이 이사회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기본 방향 등을 또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건학이념 실천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의원** 부총리께서는 2002년 현재의 판시 내용에서, '사립대학교 재학생과 교수들은 학교법인에 대한 법률적 규율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 영향이 미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단지 간접적·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는 판결 내용을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렇다면 사립학교 경영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학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위 개방형 이사로 참여한다면 이것이 현재의 판단과 법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당연한 구성원이고, 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그 여부보다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자가 참여하는 것이

고,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러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본질이나 실질적인 과정을 주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주호 의원** 교육부장관께서 저하고 토론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면밀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주호 의원** 면밀한 검토를 끝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럼요, 해 왔습니다.

○**이주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을 경우에는 큰 혼란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워헌 소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쉽게 검토를 끝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끝냈다고 보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의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 문제 법인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들을 보면 2004년 8월 현재 총 15개의 소수 사학들로 입학정원이 500명에서 20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들이 다수입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주호 의원**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는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인 학교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의 학교만 감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리 발생 소지가 높아 감사를 강화할 대상과 법적인 규제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소규모 대학의 경우 비리나 부정이 자심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큰 대학은 큰 대학대로 그곳의 비리가 터졌을 때 사회적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호 의원** 소규모 학교들의 감사를 강화하는 쪽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고맙습니다.

○**이주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을 바로잡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과 분배가 다시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로 정치 과잉에서 탈피하여 '학생 중심'으로 관치와 무책임에서 '자율과 책무의 교육'으로 과감하게 우리 학교를, 우리 교육을 탈바꿈시켜야 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출신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17대 국회가 지난 2주간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실종이었습니다. 싸우는 국회를 확 갈아엎겠다는 다짐으로 정치에 입문한 본 의원과 같은 초선 의원들은 공전기간 내내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다시는 국회가 파행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부산일보 지분 100%, 서울 MBC 지분의 30%, 그리고 경향신문 정동 사옥 7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수장학회가 정당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5·16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가 포기되는 과정이 법률적·정치적으로 하자 없는 기업가의 헌납이나, 아니면 권력의 강탈이냐의 문제입니다.

현 정수장학회의 전신은 지난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5·16장학회로 1982년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를 따서 지금까지 정수장학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서 매월 1100만 원씩 받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일장학회의 재산 포기가 헌납이

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16 군사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4월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의 운영권 포기각서를 쓴 고 김지태 전 삼화고무 사장의 유족들은 ‘분명한 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5년 8월 경향신문 소유주 이준구 사장을 반공법 혐의로 구속시켜 놓고 당시 경영 상태가 좋은 신문사를 경매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은 가장 강력한 야당지였습니다.

국무총리께 물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7월 14일 정수장학회 관련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과의 질문·답변에서 ‘어떤 성격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백하게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이 부일장학회를 비롯한 자신의 재산과 언론사를 포기하는 과정, 경향신문 사장이 구속되고 신문사가 경매되는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운영권 포기 등 불법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그와 같은 것을 명백히 규명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만약에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국방부와 국정원에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 정수장학회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5·16 당시의 정수장학회 설립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오전에도 조배숙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렸는데, 사인의 재산을 그렇게 강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공식적인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정부는 조사위

원회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이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보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의 25.5%에서 6%나 떨어졌습니다. 또 매체별 신뢰도를 보면 공중파 TV, 라디오, 인터넷신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문은 인터넷신문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언론보도에 대하여 큰 신뢰를 보이지 않는 것은 언론계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그 본래의 기능인 언론의 사회적 통합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거론한 조사에서 신문기자 스스로가 평가한 신문 신뢰도 저해 요인으로 광고주의 심각한 압력 행사, 회사 이익만을 중시하는 자사이기주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인색한 정정보도 등을 꼽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같은 언론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자사이기주의와 대안 없는 비판으로 피해를 입은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문고시조차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왜곡된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국회법에 의거하여 상정해 놓은 법안에 대하여 일부에서 좌파적이니 국민을 분열시키는 악법이니 하면서 근거 없이 왜곡하고 심지어는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광부장관께 물겠습니다.

신문사 경영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가 언론 탄압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신문사의 경영 자료 제출이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탄압과는 무관합니다. 일부 신문사들이 ABC에 가입했습니다. ABC에 가입한 것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가부수 공개를 통해서 광고 단가가 산정된다는 것

을 잘 알고 그것에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신문사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를 통한 우편배달, 그리고 지대 판매에 있어서 부가세 면제 등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서 신문산업 선진화와 정확한 기초자료 통계를 통한 광고 단가 산정 등에 반드시 자료 제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편집권의 독립은 신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편집권 독립이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편집권 독립은 언론의 내적 자유를 담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편집권 독립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편집권 독립이야말로 언론자유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 10월 26일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재허가 추천에서 MBC와 SBS에 대해 추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방송의 판정 보류 사유를 보면 MBC는 방송 시설 건립용으로 구입한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으로, SBS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6호의 승인 당시 준수사항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SBS 측의 시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방송 재허가 관련 질문을 재차 하겠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확인과 관계자 의견 청취를 듣기 위해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덮어주기식으로 추천이 이루어진다면 양 방송사의 시청자 신뢰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 결과가 금년 안에 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이번에 밝혀진 SBS의 약속 불이행은 충격적입니다. SBS는 세전 순익의 15%를 사회 환원금으로 출연하겠다고 국회에서 했던 약

속을 무시했고, 공익자금 300억 출연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SBS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와 미출연된 사회 환원금은 반드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저도 SBS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약속이 있었는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상파는 개인한테 그렇게 임의로 일반 기업처럼 대여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이익금이 있다면 약속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1990년 노태우 정부가 SBS의 모기업인 태영에 방송사업권을 준 자체는 정치적 특혜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각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에서는 SBS 허가 과정의 특혜 문제와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당시 정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에서 SBS 허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SBS 설립 허가 과정과 특혜 의혹, 세전 순익 15% 사회 환원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재허가가 나갔던 경위,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 SBS 경영 세습 과정의 불법 여부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방송위원회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사실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사도 하고 청문회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영의 하수처리장사업에 대한 특혜 여부를 아까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33조 6000억 원으로 전체 국민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10.5%로서 GDP 증가율 6.7%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Bruce Kidd 박사는 미국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33%에서 58%로 25% 증가함으로써 미국의 의료비가 연간 1조 원 가량 감소했다는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작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체육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육 참여 비율이 39.8%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주5일제 근무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체육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생활체육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1960년도에 독일 국민 누구나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체육시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골든플랜을 15년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22곳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에 1개씩의 종합 체육센터를 짓는 데만도 앞으로 최소한 30년은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한편 청소년의 체격은 비대해진 반면 체력 저하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의 심각한 체력 저하 현상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려 해도 도심지에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학교에 지으려고 해도 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한국형 골든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인조 잔디 운동장,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등 학교 종합체육시설을 최소 인구 10만 명 내지는 5만 명당 1개를 세우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이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건강과 체육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종합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학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지역주민들은 도시에서는 수영장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헬스클럽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영 같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수영장에 가면 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종합투자계획에서 학교에 수영장과 이른바 체육헬스클럽이라고 체육실내시설 이런 것을 갖추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같이 쓰면서 주민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다목적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다목적 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체육관들이 있는 데들이 더러 있고 대부분은 체육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아마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좋아할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매 맞는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들, 충격입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의 인권 유린은 수십 년간, 구체적으로 박정희 유신정권 1972년부터 수십 년간, 30년 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 시스템이 장관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금 병상선수 구타 사건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특징적으로 엘리트 체육의 병폐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우리 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각 경기단체 연맹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개혁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체육정책이 개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체육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대한체육회 그리고 올림픽위원회 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체육단체가 있습니다만, 지난 정부부터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IOC 그러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합해서 대한올림픽체육회로 통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대한올림픽체육회가 체육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선 가장 고질적인 것이 각 경기연맹의 분열도 있고 또 각 체육단체간에 여러 가지 통합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탓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체육계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단체를 통합하면서 국가 체육의 장래를 좀더 내실 있게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민석 의원** 만약 장관님께서 구상하신 그 체육 개혁의 프로세스가 체육계의 개혁적 인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판단되시면 장관님의 구상을 철회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계획은 지금 정답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국가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 올림픽에서의 남북단일팀 출전은 남과 북이 한 민족이며 군사적 대치에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올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 아테네 올림픽에서 IOC 로게 위원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단일팀을 남북이 추진한다면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이와 관련,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남북 간에는 지난 6월 13일 베이징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대강 단일팀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측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다

소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당국 간의 회담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국 간 회담이 재개되는 것을 보아서 남북체육장관회담 또 NOC 간의 회담을 통해서 단일팀 구성에 관련한 문제를 집중 검토할 생각입니다.

○**안민석 의원** 올림픽 단일팀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정세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포츠를 통해서 민족 화합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당은 개혁을 하려하고 야당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개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협력하여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두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서대문을 출신 정두언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 앞에서도 많이 인용했지만 카톨릭계의 원로이고 또 우리 한국의 지성으로서 남아 계신 정의채 신부님의 명동성당 신앙 강의 내용을 잠깐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이 발족한 후 우리에게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들볶였습니다. 국민은 두 동강, 세 동강 쪽쪽이 났으며 분열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혁’이란 단어로 생겨난 불평과 분란이었습니다. 이 나라 방방곡곡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부터 계속되는 파업과 소요, 실업, 실정, 요소요소에 정치 권력 지향적인 386세대의 등장, 급격한 경기 후퇴, 민생고가 나날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마치 6·25 때와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괴롭고 우울하고 불쾌합니다. 이 정의채 신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정말 절절한 감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착잡한 심정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정의채 신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소회를 원고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오전부터 여당의 많은 친한 동료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해야 되냐 마냐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께서 그대로 제 얘기를 대독해 주셨습니다. 아주 제 부담을 덜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난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차제에 제가 열린우리당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동료 의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당 의원’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정당 이름이 네 자인 정당 이름을 두 자로 줄여서 보통 호칭합니다. 신한민주당은 신한당, 통일민주당은 통민당이라고 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당연히 열우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우당이라고 얘기하면 마구 화를 냅니다. 저는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독선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오만과 아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지어 놓은 사람이 잘못이지 어떻게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짓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해!」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죄송하지만 계속 열우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야, 차떼기당!」 하는 의원 있음)

(「수백억씩 해 처먹고……」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께서 왜 총리를 불러 놓고 총리를 질문하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전들 왜 총리께 질문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생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상생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모독하면서 상생한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기기만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그리고 상생을 포기한 총리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총리를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총리가 사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대 개원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15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범적인 선거와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민의에 의한 국회를 건설해 냈다, 또 제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이자 시민의 국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가 국가 원수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칭찬한 17대 국회의 중요한 한 축인 제1 야당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총리는 책임총리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총리가 대통령이 그렇게 극찬한 제17대 국회에 와서 막말을 해서 정기국회가 공전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께서 사과를 중용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에 국민 앞에서 공언한 말과 완전히 상반된 발언을 하는 그런 경박한 총리는 분명 파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대통령께서는 수도 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대선기확단장 시절에 수도 이전을 주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총리가 된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상 초유의 위헌판결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 낭비와 그리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총리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신들이 통과시킨 법이잖아!」 하는 의원 있음)

과거에 문민정부 때는 UR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시 황인성 총리가 사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수대교 붕괴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영덕 총리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사의 표명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어느 장관 어느 공무원이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말조심 해!」 하는 의원 있음)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 다 사퇴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결정은 사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일이었습니다. 일본 같으면 당장 내각 총사퇴가 벌어질 일입니다.

(「일본으로 가!」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데다가 어찌되다 보니까 총리의 막말 파동으로 이 과정이 축소되어 가지고 대통령은 뒤로 쏙 빠지고 총리가 사과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대폭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총리의 고도의 책략적인 언동으로 국민과 야당이 당했다고 그런 주장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총리는 당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일찍이 이런 사태를 총리인사청문회 때 예견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총리임명동의안을 제청하면서 이해찬 씨는 높은 국정 수행 능력과 또 훌륭한 자질, 그리고 개혁성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제청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첫째, 국정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총리께서 손을 댄 일들은 모두가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국가적인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총리가 정책위 의장 시절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한전 민영화, 그리고 경인운하사업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지금 중도 하차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 시절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연금, 의약분업도 지금 심각한 후유증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대선기획본부장 시절에 추진했던 수도 이전 문제는 위헌판결을 받고 지금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장관 시절에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

어를 만들면서 교육을 황폐화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이러니 국정 수행 능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국정 파탄 능력이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내 소란)

둘째, 자질과 관련해서도 16대 의원들에 대한 의정평가를 보면 이해찬 의원은 전체 265명 중에 256등을 했습니다.

(장내 소란)

(「질문을 해요, 질문! 뭐 하냐고!」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께서 아까 오전에 나와서 청탁질의를 했습니다. 참 존경스럽지도 못한 청탁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청탁한 측이나 청탁 받아서 질의를 한 측이나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장 김원기 정두언 의원!

○정두언 의원 인사권자인 행자부장관께 묻습니다. 얼른 나오십시오.

○의장 김원기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두언 의원!

○정두언 의원 인사 주무장관인 행자부장관께 묻습니다.

○의장 김원기 정두언 의원, 의장이 경고를 하는데 지금은 질문 시간이니까 정치연설 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정두언 의원 알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당시 아까 조배숙 장관은.....

(장내 웃음)

조배숙 의원은..... (웃으면서) 장관 제가 시켰습니다.

(「웃지 말고 똑바로 해!」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당시 정책위 의장이었기 때문에 바빠서 의정평가를 못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시의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대변인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중상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유독 총리만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국회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런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입

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 또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평가한 것입니다.

(장내 소란)

(「질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또 장관 시절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 중에 1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한 평가가 아닙니다.

(「내려와,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한겨레 21, 경실련, 참여연대가 한 평가입니다.

○의장 김원기 더 이상 하면 발언 중단시키겠어요.

○정두언 의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행사부장관께 마지막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개혁성과 관련해서도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시대정신,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정서의 대척점에 서 있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민주당 정풍운동과 대통령 후보 경선 또 신당 창당 과정에서 반개혁 진영에 서 있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지금 막말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의장 김원기 마이크 꺼요!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두언 의원 이런 총리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합니까?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조배숙 의원의 청탁성 질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기 조용히 해요.

정두언 의원! 발언 중단하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당부했지만 17대 국회를 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인데 질문을 하지 않고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정부질문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대

정부질문은 규정상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번도 그런 질문이 없는 것은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장이 국회법 제146조, 제145조에 따라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질서를 잡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하는 것은 아무 제지도 안 하시고 말입니다. 의장님, 이것이 뭐하시는 것입니까.)

의장이 들어가라고 말씀하면 들어가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들어가는 것이 국회법의…… 들어가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올바른 지시를 해 주시면 듣습니다.)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안 하니까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크를 왜 꺼요. 마이크를 왜 꺼!)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남 의원, 들어가세요. 의장님이 들어가라는데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제대로 진행을 좀 하세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목회 의원님 하시는 것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총리가 하는 얘기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왜 동료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남 의원, 의장님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이 제대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이종걸 의원 단하에서 -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동료 의원의 문제는 뭐니까, 그럼.)

앞으로 부총무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국회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단호한 조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의장님! 못 들어갑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가지고 국회의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의장님을 무시하면 됩니까.)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정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총리 발언할 때에 제대로 지적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국회 파행이 왜 생겼어요. 총리 막말할 때는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사람들이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이것이 권위입니까? 총리가 국회에 대해서 막말할 때 의장이 지적하셨습니까? 그때 의장이 지적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총리한테 문제를 지적하십시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이 이상 더 하면 퇴장 명령합니다.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총리한테 먼저 질책하십시오.)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질책했잖아!)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무슨 질책을 했어요. 총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남 의원, 의장님한테 그래서 우리 국회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국회의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 의원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두언 의원, 발언하세요.

앞으로 국회의장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사람이 발언할 때에는 반드시 질서를 지킬 것입니다.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발언하지 말라 하면 발언하지 마세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퇴장 명령이랑이요?)

질서를 어길 때는 앞으로 퇴장 명령하겠어요.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정파적인 그런 진행을 하지 마십시오. 마이크 함부로 끄지 마십시오.)

(○노현송 의원 의석에서 - 어른한테 예의를 못 지켜! 어른한테 예의도 못 지키느냐고!)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노현송 의원님! 이것은 국민의 대표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총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보세요, 의원님들!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남 의원님!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장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어떻게 우리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총리가 야당에 대해 폄하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임종인 의원 단하에서 - 이제 그만하고 진행합시다.)

(○남경필 의원 단하에서 - 의원님들, 얘기 하셨어요? 창피한 줄 아십시오. 노현송 의원님 창피한 줄 아세요!)

(「정 의원, 질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두언 의원 장관님, 아까 제가 여쭙었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소란스러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두언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서 2004년 11월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90만 4266명에서 한 2만 726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수의 60%, 70%까지는 교사, 경찰 이렇습니다.

○정두언 의원 숫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차관급 정무직 숫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정무직이 106명에서 119명으로 13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렇지요? 앞으로 복수 차관 자리는 몇 자리 늘리실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두언 의원 그래요? 내년도 공무원 총 인건비 예산은 과거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서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내년도 인건비 예산이 19조 원 정도로 예산이 되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24조 3000억이었습니다.

○정두언 의원 장관님,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제가 행자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과거 18조 7000억 원에서 내년도에 24조 1000억 원으로 바뀐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그것은 아마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가 민영화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봅니다.

○정두언 의원 특히 위원회가 많이 변동이 있었는데 청와대 산하 위원회는 몇 개에서 몇 개로 바뀐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청와대 산하 위원회는 18개에서 21개로 3개가 늘어났습니다.

○정두언 의원 자료가 뻘히 11개에서 22개로 바뀐다고 저한테 보내 왔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두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의 정부 때 357억에서 지금 565억으로 늘었다가 내년도에는 1646억을 편성해 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민간 부문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양산되고 노숙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만은 이렇게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심의를 통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이렇게 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들이, 지금 각 부처는 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것을 집행만 합니다. 그러니 결국 위원회는 책임을 안 지고 각 부처에서 책임을 지지만 결정은 엉뚱한 데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정부 조직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계서는 지금 정부가 마구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저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두언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정부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작은 정부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

니까 그동안 행정수요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국민의 갈등수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국민과 접점이 되는 분야는 불가피하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저는 이렇게 마구 늘어난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더 마구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차기 정부는 이 늘어난 정부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누가 집권을 하든지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예.

○정두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정 단상에서 세 가지를 목도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라고 보이는 세 가지를 목도했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마이크를 켜습니다. 또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발언대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우리나라 법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한마디입니다.

퀴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내 소란)

○의장 김원기 조용히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앉아 주세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발언권을 의장한테 얻는 사람만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질문 시간은 어디까지나 일문일답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물론 모두의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정치의 장이니—일문일답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서 다시는 서로 간에 감정적인 대립과 소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역사관건립을 위한 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4. 10. 25.

제안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통칭되는 일본군성노예제도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외침과 사회적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일본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년간 90여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129명의 피해자도 거의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인류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성노예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해방 60주년이 되는 2005년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기 위하여, 또한 우리나라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주권국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인으로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우리정부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증언하는 역사관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

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에 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역사관」을 우리 정부가 건립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역사관건립을 위한 결의안**

**투표의원(191인)**

**찬성의원(182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문수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복기왕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영근	안홍준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덕모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열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 여 옥 전 재 회 정 덕 구 정 두 언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복 기 왕  
 정 몽 준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서 갑 원 서 병 수 수 상 기 서 재 관  
 정 종 복 정 청 래 정 조 매 숙 정 조 성 래 서 손 봉 숙 서 송 영 길 서 송 영 선  
 조 승 수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신 국 환 신 신 중 식 신 심 재 심 상 영 선  
 진 수 회 진 영 영 채 수 찬 지 천 영 세 심 재 덕 옥 안 민 석 안 심 재 영 철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안 명 옥 안 홍 준 안 양 승 영 조 영 철  
 최 병 국 최 재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안 영 근 안 염 동 연 양 오 영 식 오 영 식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환 광 원 안 염 호 성 우 원 식 우 윤 근 윤 근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준 국 최 철 국 한 선 교 한 환 광 원 안 염 호 성 우 원 식  
 황 우 여 황 진 하 홍 홍 창 선 홍 창 선 홍 창 선 홍 창 선 홍 창 선 홍 창 선  
**반대의원(2인)**  
 박 혁 규 이 명 규  
**기권의원(7인)**  
 권 오 을 김 종 인 배 일 도 이 방 호  
 이 상 배 이 인 기 정 갑 윤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복 기 왕  
 서 갑 원 서 병 수 수 상 기 서 재 관  
 신 국 환 신 신 중 식 신 심 재 심 상 영 선  
 안 명 옥 안 홍 준 안 양 승 영 조 영 철  
 안 영 근 안 염 동 연 양 오 영 식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윤 근  
 우 체 항 우 원 혜 영 우 원 희 승 민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덕 모 이 명 규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상 락 이 상 민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철 우 이 한 구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호 응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해 훈 이 중 인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중 심  
 임 체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진 재 회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병 국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헌 정 의 용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칭 래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최 경 환 최 구 식  
 천 영 세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인 기  
 최 규 성 최 최 연 회 최 최 인 기  
 최 순 영 최 최 철 국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한 환 광 원 한 명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홍 창 황 황 황 황 황 황  
 황 진 하 황 진 하 황 진 하 황 진 하

○出席議員(281人)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석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맹 곤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결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부 김 정 훈 김 중 룡 김 중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흥 일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회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중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혁 규 박 박 형 준 박 박 홍 수

○請暇議員(13人)



김영주 김형주 노영민 박희태  
변재일 신계륜 신기남 안택수  
윤호중 이광재 이영호 장향숙  
정화원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무총리 이 해 찬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병 영  
법무부장관 김 승 규  
행정자치부장관 허 성 관  
문화관광부장관 정 동 채  
보건복지부장관 김 근 태  
환경부장관 광 결 호  
노동부장관 김 대 환  
여성부장관 지 은 희

○出席政府委員

행정자치부차관 권 오 룡

【報告事項】

○議案提出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역사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

(10월25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출)

光州科學技術院法中改正法律案(한화갑 의원 대표  
발의)

(11월3일 한화갑·김명자·김성곤·김춘진·  
김태홍·김혁규·김홍일·김효석·류근찬·  
손봉숙·신국환·신중식·염동연·유선호·  
유승희·이낙연·이상열·이정일·정성호·  
최인기 의원 발의)

11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觀光振興法中改正法律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이경숙·이미경·우상호·이재오·  
김덕규·안상수·이윤성·백원우·염호성·  
김태년·배일도·강혜숙·이인영·한병도·  
정봉주·신학용·채수찬·노영민·정의용·  
문학진·김재윤·안민석·제종길·이광철·  
윤호중·주승용·이호웅·최재성·김교홍·  
정청래·우윤근·유기홍·김혁규·이계안·  
이시중·복기왕·박기춘·김현미·김춘진·  
김형주·우원식·장향숙·노현송·김낙순·  
김영춘·박영선·이용희·정세균·김종률·  
김선미·최규성·노웅래 의원 발의)

11월4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박혁규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박혁규·유승민·고홍길·이근식·

이혜훈·김덕규·주성영·이인기·정병국·  
이상배·우제항·안홍준·이규택·김재원·  
배일도·정성호·이상득·엄호성·서병수·  
이재창·임인배·이윤성·정의화·염동연·  
공성진·김명주·이균현·이원영·홍창선·  
김태홍·황우여 의원 발의)

11월4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北韓離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 支援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김학원·류근찬·박재완·이원영·  
정병국·이윤성·김석준·노웅래·김충환·  
김낙성·이재오·서재관·염동연·이근식·  
안상수·김기현·신중식·엄호성·김덕규·  
정의화·오시덕·강재섭·이해봉·박성범·  
신국환·이인기·김광원·오제세 의원 발의)

남북관계기본법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정문헌·박형준·권영세·이주호·  
권오을·유기준·박승환·김기현·진수희·  
정병국·원희룡·유정복·남경필·이재오·  
이성권·김양수·이계경·김명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우윤근·김용갑·박재완·염동연·  
오영식·이상경·이상열·이영호·정성호·  
주승용·한병도·최순영 의원 발의)

都市가스事業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  
의)

(11월3일 임인배·배일도·한선교·심재엽·  
김애실·김태환·김영숙·안경률·김성조·  
장윤석·이근식·권경석·박진·황진하·박  
계동·송영선·김용갑·주호영·유기준·엄  
호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4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권영세 의원 대표발  
의)

(11월3일 권영세·전재희·박성범·유승민·  
전여옥·황우여·김재원·임태희·이재오·  
박재완·박찬숙·진수희·정두언·이계경·  
김희정·박종근 의원 발의)

11월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信用情報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이계  
안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이계안·박영선·이상경·홍재형·

심상정 · 이종구 · 박병석 · 김현미 · 김효석 · 송영길 · 심재덕 · 오제세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임태희 · 유승민 · 고흥길 · 엄호성 · 이인기 · 박재완 · 심재철 · 김양수 · 이재오 · 이해봉 의원 발의)

**水道法中改正法律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허태열 · 이윤성 · 한선교 · 서병수 · 백원우 · 안상수 · 정문헌 · 이해봉 · 이인기 · 김태환 · 김양수 · 엄호성 · 김재윤 · 유필우 · 유정복 · 안경률 · 안택수 · 박형준 · 박승환 · 김덕규 의원 발의)

11월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철도사업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1월3일 이호웅 · 김한길 · 이강래 · 김맹곤 · 최인기 · 주승용 · 노영민 · 장경수 · 정장선 · 조정태 · 김동철 · 김기석 의원 발의)

11월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不動産仲介業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11월4일 정장선 · 김동철 · 주승용 · 김교홍 · 유필우 · 이강래 · 김부겸 · 이낙연 · 조정태 · 이호웅 · 이윤성 · 노영민 · 김맹곤 의원 발의)

11월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11월4일 현애자 · 강기갑 · 권영길 · 김재윤 · 김재홍 · 노회찬 · 단병호 · 손봉숙 · 심상정 · 우원식 · 이시종 · 이영순 · 이재오 · 엄호성 · 정성호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의원 발의)

11월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11월4일 맹형규 · 황우여 · 김재윤 · 염동연 · 이상열 · 신국환 · 김교홍 · 박세환 · 안경률 · 김태홍 · 김태환 · 서재관 · 이병석 · 최철국 · 엄호성 · 정성호 · 이규택 · 이근식 · 박성범 · 주승용 · 심재덕 · 김재원 · 오제세 · 이인기 · 서병수 · 유승민 · 고흥길 · 박순자 · 안상수 · 김원웅 · 최경환 · 이근현 의원 발의)

11월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障礙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11월4일 우원식 · 구논희 · 김영주 · 김형주 ·

노영민 · 심재덕 · 우상호 · 유기홍 · 유승희 · 윤호중 · 이목희 · 이용희 · 이인영 · 이화영 · 장복심 · 전병헌 · 제종길 · 조정식 · 최규성 · 최재성 · 한병도 의원 발의)

11월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김효석 · 한화갑 · 이근식 · 정성호 · 김재원 · 허태열 · 엄호성 · 서병수 · 유승민 · 안상수 · 이해훈 · 김홍일 · 서재관 · 이해봉 · 이인기 · 제종길 · 최인기 · 손봉숙 · 김성곤 · 김원웅 · 김덕규 · 오제세 · 신국환 · 이상열 · 이원영 · 유선호 · 이시종 · 심재덕 · 배일도 · 한병도 · 신중식 의원 발의)

11월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낙연 · 강길부 · 김광원 · 김홍일 · 김효석 · 박성범 · 손봉숙 · 안경률 · 이상열 · 이승희 · 이정일 · 정종복 · 지병문 · 최인기 · 최재천 · 한화갑 의원 발의)

11월6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김재경 · 유승민 · 김석준 · 임태희 · 최구식 · 김양수 · 신학용 · 노회찬 · 고흥길 · 이성권 · 권영세 의원 발의)

**國家賠償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인기 · 고흥길 · 광성문 · 임인배 · 서병수 · 김충환 · 이명규 · 유기준 · 손봉숙 · 장복심 · 서재관 · 지병문 · 심재덕 · 박찬석 · 박기춘 · 박찬숙 · 정종복 · 한화갑 의원 발의)

**刑法中改正法律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양승조 · 정성호 · 김원웅 · 안상수 · 홍창선 · 박재완 · 김덕규 · 유시민 · 이원영 · 우재창 · 이상락 · 임종석 · 엄호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김현미 · 민병두 · 오시덕 · 장향숙 · 신중식 · 이계안 · 천영세 · 한명숙 · 김영춘 · 심상정 · 정성호 · 임종석 · 이근식 · 허태열 · 조배숙 · 김우남 · 홍미영 · 제종길 · 최순영 · 박홍수 · 유선호 · 송영길 · 김명자 · 문학진 · 이상락 · 노회찬 · 유승희 · 김애실 · 정세균 · 이계경 · 이경숙 · 손봉숙 · 강기갑 · 조승수 ·

권영길 · 장복심 · 백원우 · 복기왕 · 정장선 ·  
홍창선 · 우제창 · 최성 · 진수희 의원 발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  
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김현미 · 임종석 · 이근식 · 허태열 ·  
조배숙 · 김우남 · 홍미영 · 제종길 · 최순영 ·  
박홍수 · 진수희 · 민병두 · 오시덕 · 장향숙 ·  
신중식 · 이계안 · 이상락 · 노회찬 · 천영세 ·  
유선호 · 송영길 · 김명자 · 문학진 · 한명숙 ·  
김영춘 · 심상정 · 이계경 · 이경숙 · 유승희 ·  
정세균 · 손봉숙 · 강기갑 · 조승수 · 권영길 ·  
장복심 · 백원우 · 복기왕 · 정장선 · 홍창선 ·  
우제창 · 최성 · 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  
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김현미 · 임종석 · 이근식 · 허태열 ·  
조배숙 · 김우남 · 홍미영 · 최순영 · 박홍수 ·  
이상락 · 진수희 · 민병두 · 오시덕 · 장향숙 ·  
신중식 · 이계안 · 한명숙 · 김영춘 · 심상정 ·  
이계경 · 유선호 · 송영길 · 김명자 · 문학진 ·  
노회찬 · 천영세 · 유승희 · 정세균 · 이경숙 ·  
손봉숙 · 강기갑 · 조승수 · 권영길 · 장복심 ·  
백원우 · 복기왕 · 정장선 · 홍창선 · 우제창 ·  
최성 · 정성호 의원 발의)

**公衆衛生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  
의)**

(11월5일 이호웅 · 엄호성 · 이재오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민 · 원혜영 · 강혜숙 · 안상수 ·  
우원식 · 김영춘 · 서재관 · 신학용 · 김태홍 ·  
임종석 · 주승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원영 ·  
이상락 · 황우여 · 심재덕 · 신중식 · 김교홍 의  
원 발의)

이상 2건 11월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원순환형경제사회형성촉진기본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호웅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민 ·  
정성호 · 염동연 · 원혜영 · 이원영 · 박재완 ·  
신학용 · 이재오 · 김태홍 · 임종석 · 주승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시종 · 우제창 · 백원우 ·  
황우여 · 정청래 · 오제세 · 심재덕 · 엄호성 ·  
신중식 · 김교홍 · 유선호 의원 발의)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호웅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민 ·

정성호 · 염동연 · 원혜영 · 안상수 · 이원영 ·  
신학용 · 이재오 · 김태홍 · 임종석 · 주승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시종 · 우제창 · 백원우 ·  
황우여 · 정청래 · 오제세 · 심재덕 · 엄호성 ·  
신중식 · 김교홍 · 유선호 의원 발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호웅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호웅 · 서재관 · 신학용 · 김태홍 ·  
임종석 · 엄호성 · 이재오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민 · 강혜숙 · 안상수 · 주승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원영 · 이상락 · 김영춘 · 황우여 ·  
심재덕 · 신중식 · 김교홍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建築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호웅 · 엄호성 · 이재오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민 · 안상수 · 우원식 · 신학용 ·  
김태홍 · 임종석 · 주승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원영 · 이상락 · 김영춘 · 황우여 · 심재덕 ·  
신중식 · 김교홍 · 전재희 의원 발의)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호웅 · 서재관 · 신학용 · 김태홍 ·  
임종석 · 주승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원영 ·  
이상락 · 엄호성 · 이재오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민 · 안상수 · 우원식 · 김영춘 · 황우여 ·  
심재덕 · 유정복 · 신중식 · 김교홍 · 전재희 의  
원 발의)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  
의)**

(11월5일 이호웅 · 엄호성 · 이재오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민 · 정성호 · 안상수 · 우원식 ·  
신학용 · 김태홍 · 임종석 · 주승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상락 · 김영춘 · 황우여 · 심재덕 ·  
신중식 · 김교홍 · 전재희 의원 발의)

**철도건설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호웅 · 김맹곤 · 주승용 · 노영민 ·  
김동철 · 이강래 · 정장선 · 장경수 · 조경태 ·  
김기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호웅 · 엄호성 · 이재오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민 · 강혜숙 · 안상수 · 우원식 ·  
신학용 · 김태홍 · 임종석 · 주승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원영 · 이상락 · 김영춘 · 심재덕 ·  
신중식 · 김교홍 · 전재희 의원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

표발의)

(11월5일 김영숙·배일도·박계동·박혁규·이재웅·주성영·이재오·김문수·정종복·공성진·김석준·김양수·김애실·엄호성·안상수·박성범·박진·진수희·허천·서상기·이계진·임인배·안명옥·정병국·박순자·이군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이인기·고홍길·곽성문·임인배·서병수·김충환·이명규·유기준·손봉숙·장복심·서재관·지병문·심재덕·박찬석·박기춘·박찬숙·정종복 의원 발의)

11월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水質環境保全法改正法律案**(제종길 의원 대표발의)

(11월5일 제종길·공성진·김명자·김영주·김원웅·김태홍·김형주·단병호·박홍수·배일도·우원식·이목희·이영호·이철우·장복심·정두언·조정식·한광원 의원 발의)

11월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위원(김호준)선출안**

(11월10일 의장 제의)

**주택법중개정법률안**(김맹곤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김맹곤·구논희·김기석·김애실·김원웅·김종률·엄호성·이시중·장경수·장복심·정봉주·정성호·조경태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허태열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허태열·안상수·유기준·김재원·안경률·박재완·이재오·이해봉·엄호성·전재희·황우여·이인기·정성호·장복심·김양수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김동철·양형일·김태홍·강기정·신중식·김영춘·김우남·지병문·염동연·백원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유정복·이윤성·유승민·정문헌·이시중·서병수·김충환·고경화·이해봉·김재윤·김태년·최경환·홍준표·장복심·박재완·이인기·허천·김기현·황우여·심재덕·염동연 의원 발의)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유정복·이윤성·정문헌·이시중·서병수·김충환·정성호·박세환·김재윤·김태년·신국환·최경환·홍준표·박재완·허천·황우여·김덕규·김재원·권영세·심재덕 의원 발의)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김한길·송영길·임채정·이명규·박재완·김재원·유승민·이상득·이해봉·이시중 의원 발의)

**公職者倫理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박재완·이철우·황우여·임채정·유재건·김재홍·신기남·정장선·최규성 의원 발의)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임채정·유재건·김맹곤·복기왕·신기남·정장선·최규성·박계동·강창일 의원 발의)

**農漁村道路整備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조경태·박재완·이철우·황우여·임채정·유재건·김재홍·복기왕·신기남·정장선 의원 발의)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노현송·임채정·이명규·박재완·박순자·유승민·이상득·이해봉·김재윤·이시중·서병수 의원 발의)

이상 7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05년도에만기도래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의원리금상환을위하여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11월11일 정부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이목희·김한길·김재윤·김형주·원혜영·이시중·김덕규·김원웅·문병호·이은영·우원식·장복심·조정식·제종길·김영주·김태년·서갑원 의원 발의)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장복심·문석호·노영민·노웅래·제종길·조정식·김태년·김기석·김재윤·송영길·오영식·김영춘·이낙연·이인영·배기선·박상돈·이호웅·권선택·이철우·

김태홍 · 최재성 · 이목희 · 최철국 · 염동연 · 이상락 · 홍준표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 · 박재완 · 이철우 · 황우여 · 임채정 · 유재건 · 김재홍 · 복기왕 · 신기남 · 정장선 의원 발의)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조정식 · 김부겸 · 고진화 · 한병도 · 우원식 · 장복심 · 김형주 · 이목희 · 김태년 · 서갑원 · 김영주 · 제종길 · 단병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지병문 · 조배숙 · 구논희 · 백원우 · 복기왕 · 유기홍 · 이인영 · 정봉주 · 최재성 · 이낙연 · 최철국 · 이상열 · 양형일 · 최규성 · 김홍일 · 홍미영 · 강기정 · 김맹곤 · 이강래 · 이철우 · 최규식 · 김효석 · 김우남 · 김태홍 · 송영길 · 김동철 · 염동연 의원 발의)

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 · 이인기 · 임채정 · 유재건 · 복기왕 · 김기석 · 신기남 · 한광원 · 심재덕 · 노영민 · 정장선 의원 발의)

**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 · 이인기 · 임채정 · 유재건 · 복기왕 · 김기석 · 신기남 · 한광원 · 심재덕 · 노영민 · 정장선 · 김태년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 · 이인기 · 임채정 · 유재건 · 복기왕 · 김기석 · 신기남 · 한광원 · 심재덕 · 노영민 · 정장선 · 김태년 의원 발의)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 · 엄호성 · 이해봉 · 임채정 · 유재건 · 복기왕 · 신기남 · 이낙연 · 김재윤 · 정장선 의원 발의)

이상 4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허태열 · 안상수 · 유기준 · 김재원 · 안경률 · 박재완 · 이재오 · 이해봉 · 엄호성 · 전재희 · 황우여 · 이인기 · 정성호 · 장복심 · 김양수 의원 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豫算會計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1월11일 정성호 · 엄호성 · 이해봉 · 임채정 · 유재건 · 복기왕 · 신기남 · 이낙연 · 김재윤 · 정장선 의원 발의)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書面質問書提出

**공동계약체결에관한질문서**

(11월11일 김성조 의원 제출)

#### ○書面答辯書提出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9조제1항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1월6일 정부 제출)

**지방환경관서정비(안)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11월9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 ○報告書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 대한처리결과보고서**

(11월2일 정부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